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주요일간지 Headline

2024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5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동국제약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 출시!
문의 1800-6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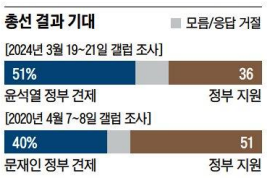
朝鮮日報

안내 (02)724-5114 구독·배달 080-900-0077 1920년 3월 5일 창간 104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음력 2월 14일 丙戌 chosun.com

"정부 견제해야" 4년 전보다 늘었다

총선 D-18, 민심의 현주소

갤럽 조사 "尹정부 심판" 51%
지난 총선 "文정부 심판" 40%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36%보다 15%포인트 많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의 58%도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만이 여당 승리를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총선 일주일 전인 4월 7~8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1%였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40%였다. 둘의 격차는 11%포인트로 현재의 15%포인트보다 작았다. 이런 여론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보수가 기록적 패배를 기록한 2020년보다도 더 '정권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투표일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 발표하는 지역구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8~20일 시행한 조사에서 서울 종로의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49%로, 31%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18%포인트 앞섰다. 승부처인 '반도체 벨트' 경기 화성을에서도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42%를 받은 반면, 국민의힘 한정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20%에 못 미쳤다. 성남 분당갑·을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김병욱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19~20일 조사한 여론은 수원병에서도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45%로, 국민의힘 방문규 후보 37%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필·김태준 기자 A3면에 계속

대통령실

천안함 함께 둘러본 尹대통령과 韓비대위원장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22일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에 폭침됐던 천안함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한 위원장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기사 A2면

표적된 '애플 생태계'… 성장 공식이 부메랑으로

美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자사 제품만 호환 덕분에 급속 성장

美 "지배력 남용 두더지 잡기 하듯 경쟁사들을 억압"

"애플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법으로 1990년대 이후 압박하며 생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럼에도 과거의 MS와 비슷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한 88쪽짜리 소장(訴狀)을 통해 애플이 2007년 스마트폰(아이폰) 출시 이후 단계적으로 구축한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아이폰과 앱(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음악·금융 등 부가서비스, 연동 액세서리인 스마트워치(애플워치)까지 모두 치밀하게 연계돼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사업 행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지목한 것이다. 아이폰의 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70%다.

애플은 자사 상품·서비스끼리만 잘 연동되는 폐쇄적 생태계를 사업 전략으로 삼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사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고 잠재적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날 소장을 공개하며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두더지 잡기' 하듯 경쟁사들을 억압해 왔다"며 "이런 행태는 소비자의 경험도 저하시켰다"고 했다. AP 등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에 따라 법무부가 애플의 해체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행위는 애플의 정체성과 제품 차별화를 위협한다"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A5면에 계속

"여전히 9회말 2아웃 상황 선거 시작돼 흐름 바뀔 것"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인터뷰

"극단주의 세력이 주류 진입하면 민주주의·경제 발전은 불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 대해 "통진당 후예와 조국 등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는 선거"라고 했다.

그는 옛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민주당과 연대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은 한마디로 유죄를 받고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점에서 극단주의 세력"이라며 "어느 사회나 극단주의자는 있지만 이들이 주류에 진입하면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총선 상황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처럼 여전히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라는 마음"이라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를 보는 민심 순응 세력"이라며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력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고 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조기 귀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정부의 종전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이걸 왜 싫어하실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A4면에 계속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중국

내수 침체되자 수출 헐값 공세

친중 국가까지 "중국산 막아야"

"중국산 제품의 약탈적 영업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으로 대표적 친중(親中) 행보를 보여온 브라질의 화학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반(反)덤핑 조사에 나섰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중국산 등 수입 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을 검토 중이다. 실제 올 1~2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인 1590만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뿐 아니라 주요 산업에서 초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발(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내수 소비가 죽은 중국이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정구 기자 A10면에 계속

김혜순 시집 '날개 환상통'
전미 도서비평가협회상 A18

八面鋒

野, 성폭력 변호 후보 새벽에 벼락 사퇴. 지금부터는 빗장 수비로 지키는 축구를 하겠다는 것.

○

醫大 가기 쉬운 지방에 초등생 자녀 전학시키려는 수도권 학부모들. 6년 뒤 의사 몸값, 지금 같진 않을 텐데.

○

넉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 '저탄소' 목표로 공사 한창. 사람 좀 움직이려면 탄소 배출이니 이거 참.

SUNDAY가 만난 사람 32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기업사냥꾼·먹튀? 최소 10년은 지켜보고 평가를"

중앙SUNDAY

2024년 3월 23일~24일 제 882호
joongang.co.kr/sunday

후보 등록 마감날 끝까지 파행 공천

성지원·신수민·이가람·전민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22일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 699명 등록

여, 비례당에 의원 5명 '긴급 대여'

야, 조수진 대신 한민수 '벼락 공천'

여야 모두 청년·여성 공천 뒷걸음

여성, 21대보다 5%P줄어 14.2%

2030비율 6.1%→5.4%로 감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후보등록이 22일 마감됐다. 공천 과정에서 분란이 쇄신보다 앞섰던 거대 양당은 후보등록 막판까지 우왕좌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계 한민수 후보를 서울 강북을에 공천했다. 현역 박용진 의원은 세 번째 외면당했다. 전날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5명의 지역구 의원을 입당시켰다.

양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혁과 쇄신, 여성·청년 중용을 약속했지만, 말에 그쳤다. 오히려 후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전체 의석 300석 중 254석)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21곳, 지역구 후보는 699명이었다. 민주당이 246명, 국민의힘이 254명을 공천했고,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 28명,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1명, 진보당 21명(기호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00명, 여성 99명(14.2%)이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성 비율 19.1%보다 4.9%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보자 4명, 30대 후보자 34명으로 2030세대의 비율은 5.4%에 그쳤다. 4년 전 총선 당시 2030 후보 비율은 6.1%였다. 반면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81.9%(562명)였다. 80대 후보도 3명에 달했다. 최연장자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일윤(85) 무소속 후보이고 최연소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우서영(28) 민주당 후보였다.

양당은 그간 여성·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해왔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월 12일 첫 회의에서 "젊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를 중점적으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1월 16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특히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의 평균 연령은 57.4세이었고 2030세대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11.8%였다. 민주당도 지역구 후보 평균 연령이 56.6세, 2030세대 비율이 3.7%에 그쳐,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여성 비율만 16.7%로 평균보다 높았을 뿐이다.

전체 후보자 가운데 재산신고 1위는 경기 부천갑의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로, 1446억6700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1401억3500만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였다.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 후보였다.

▶4면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새 천안함 앞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북한 어뢰에 폭침된 뒤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 지난해 12월 실전 배치된 새 천안함(FFG-826)을 배경으로 거행됐다. 새 천안함은 2800t급으로 구형(1000t급)보다 함급이 격상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55명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천안함 앞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독점 피소' 애플 하루새 시총 154조원 증발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미 법무부, 애플 폐쇄적 생태계 겨냥

주가 4.09% 추락 171.37달러에 마감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계획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본토에서도 애플에 칼끝을 겨누면서 애플 주가는 하루 새 4% 이상 추락하고 시가총액은 154조원 증발했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태블릿·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한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무부 성명서에 따르면 애플은 다른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수퍼앱'(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한 앱)을 아이폰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또 소비자가 게임이나 기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개발도 차단했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경우 창 색을 다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를 구분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다른 결제사업자들이 자체 디지털 지갑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탓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 정부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며 애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4.09% 하락한 171.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에만 시가총액 1150억 달러(약 154조5000억원)가량이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애플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 온 폐쇄적 생태계가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플의 수난은 이게 끝이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곧 앱마켓 개발자에게 새로 적용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디지털시장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애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EU는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혜순 『날개 환상통』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김혜순(69·사진) 시인의 시집 『팬팀 페인 윙스(Phantom Pain Wings·날개 환상통)』가 미국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 시 부문 상을 받았다. 한국 문학 작품이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23 NBCC 어워즈'를 열고 시집 『날개 환상통』의 영어판인 『팬팀 페인 윙즈』를 시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는 이 시집을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대담하게, 전쟁과 독재의 여파,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삶의 고통, 이를 극복하는 의식을 대안적 상상의 세계로 반영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2면 '김혜순'으로 이어집니다

SPECIAL REPORT 6면

4·10 총선 격전지 ④영산강 벨트

"암만해도 민주당" "정신 차려라"

CULTURE 20면

영화 '파묘'와 얼굴 글씨 논란

악령 막는 주술, 미·일에도 있어

중앙SUNDAY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Weekend
東亞日報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단기 4357년 음력 2월 14일 丙戌

104 since 1920

술담화 찾아오는 인생 술, 전통주 구독 서비스 더 알아보기

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과정 KAIST AI

1920년 4월 1일 창간 제31895호 40판

중남미 왜 '갱단 무법천지' 됐나 갱단 폭력에 휩싸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살인, 약탈, 방화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도 갱단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남미의 고질적 경제난과 양극화, 정치권의 부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2면

전과자-反美-피고인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여야 위성비례정당 등 38개 난립
졸속 검증 후보들 당선권에 배치
'전문가 등 배려' 비례 취지 외면

총선 D-18

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모두 인정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는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이후 생긴 기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반미 시위 참여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서해수호의 날… 폭침 천안함 선체 살펴보는 尹-韓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천안함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황상무 사퇴·이종섭 귀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 왼쪽은 천안함 전 함장인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틈을 타 양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nk85@donga.com·유채연 기자 ▶3면에 관련기사

칼칼한 맛 유튜브 끄고 '도파민 단식' 12시간 슴슴한 곰탕이 느껴졌다

휴대전화와 작별한 지 30분.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업무 연락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잠시, 일종의 '금단 증상'이 찾아왔다. 분명히 휴대전화를 끄고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놨는데 어디선가 '카톡!' 하는 알림이 온 듯한 환청이 느껴졌다. 진동이 울린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도 했다. 18일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도파민 단식'에 나선 기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문제는 '질 나쁜' 도파민에 빠져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짧은 영상 위주의 쇼트폼 콘텐츠를 시청할 때가 대표적이다. 손쉽게 분노와 기쁨을 느끼며 도파민이 빠르게 분출되고, 이를 중단하면 우울과 불안이 밀려오면서 큰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다.

휘발성 자극을 모두 끊고 그 시간을 독서나 산책으로 채우면 몸과 마음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본보 기자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도파민 단식에 나선 건 이런 이유였다.

임재혁 heok@donga.com·김수현 기자 ▶10면에 계속

비명 쳐내려 '막말 인사→성범죄 변호인→친명 벼락공천'

강북을, 정봉주 이어 조수진 사퇴
후보등록 마감 6시간 20분 앞두고
민주 '무연고 친명' 한민수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사퇴한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 자리에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전략경선 끝에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따낸 조 후보가 4·10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 새벽 자진 사퇴하자 전략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친명계 원외 후보를 등록 마감 시간(오후 6시) 6시간 20분 전에 급하게 전략공천한 것.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현역을 찍어 내려다가 벌어진 역대급 '공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0시 40분경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19일 박 의원과의 전 당원 전략경선에서 승리한 지 사흘 만이다. 이로써 한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 확정 사흘 만에 사퇴한 정봉주 전 후보와, 조 후보에 이은 민주당의 세 번째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됐다.

당내에선 "'무근본 졸속' 공천에 따른 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친명계 지도부가 눈엣가시 같던 박 의원을 날리려고 무리수 공천을 남발한 결과"라며 "강북을에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세 명째 바꿔가며 후보로 내세우면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전에 (조 전 후보) 변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증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 사과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적용해주길 바란다"며 "그 말(성범죄자 변호 논란)은 그만하자"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5면에 관련기사

EU규제-美소송, 사면초가 애플 2면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또한 애플에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애플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폰이 미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점유한 것은 '제품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이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체제(OS)의 사용을 어렵게 했고,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LG전자 등이 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지적했다.

내일 신문 쉽니다 dongA.com 서비스는 계속

몸안의 독소 해독 해주는 청소기- 간과 신장에 꼭 필요한 알부민(Albumin)!

5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동국제약그룹

Dongkook 동국헬스케어홀딩스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 출시!

기력이 쇠하십니까?
늘 피곤합니까?
알부민 부족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천근만근 피곤이 안풀려 만성피로?...나이 탓 아냐~

의학 상담 전문가는 간과 신장을 기계로 비유하자면 '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 와 같다고 한다. 콩팥(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면 알부민의 양도 줄어 들기 때문에 알부민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알부민이 부족해 지면 부족한 만큼 채워 주면 좋다.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제약의 동국 헬스케어 홀딩스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인 '알부민 골드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여 화제다. 이 제품은 알부민 복합물 79.81%, L-아르기닌 150mg, 비타민C 75mg, L-아스파트산 60mg을 혼합한 액상으로 개발하였다. 1일 1회(30ml)를 식전 식후 아무때나 복용하셔도 효능을 볼 수 있다. 관계자는 "알부민은 부작용이 없어 항생제등의 약물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수술 후 빠른 건강 회복에 필요한 분이나, 기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에 지친분들에게 권한다" 로 전했다. 관계자는 마시는 알부민 출시기념으로 **백화점가 50% 할인한 금액으로 신문광고에 한해 드리며 2박스 구매시 1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선착순 100분에게 한정 판매** 된다. 자세한 문의는 www.더드림24.com 또는 **1800-6639**로 하시면 된다. 입금계좌 〈농협〉 317-0027-7491-11 예금주:(주)더드림 홈쇼핑이다.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가능〉

30ml X 30병 (한달분)

Dongkook 동국헬스케어홀딩스 문의: 1800-6639

한국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한미약품-OCI 통합 빨간불 켜졌다 ▶A12면

수입과일 러시 안정세 찾은 사과값 ▶A14면

Market Index <22일>			4판
코스피지수	2748.56	↘	-6.30
코스닥지수	903.98	↘	-0.31
KEDI 30	2580.83	↗	+0.26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284	↘	-0.022
환율(원·달러)	1338.40	↗	+16.00
원 엔(100엔당)	883.75		
원 유로	1449.82		

NH투자증권 투자, 문화가 되다

한국경제 Since 1964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hankyung.com
제18957호 | 대표전화 02) 360-4114

최장 11개월 … 'IPO 가는 길' 꽉 막혔다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얼마 전 한국거래소의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해 2월 신청했는데 11개월 만인 올 1월 심사를 통과했다. 이 회사는 오는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예비심사부터 상장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관련기사 A3면

상장 추진 기업이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에 6개월 넘게 묶여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초 한두 달 남짓이던 심사 기간이 길어져 새롭게 신청한 기업 수십 곳이 정체 대열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자본시장의 핵심 통로에서 역대급 '병목' 현상이 벌어지며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 '역대급 병목' … 자금조달 차질

상장 심사기간 계속 지연 … 지난해 평균 85일
규정상 45일내 끝내야 … 특례상장 증가 영향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예비심사를 받는 곳은 41곳이다. 이 중 28곳이 지난해 하반기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간과 대상 기업 수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엔셀 등 바이오 회사 2곳은 8개월째 심사 중이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심사 신청을 받은 뒤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원활한 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규정이다. 그런데 최근 원칙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거래소의 평균 심사 기간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50일이 안 됐지만, 매년 늘어 지난해 85.4일에 달했다. 올해는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계에서는 바이오·플랫폼·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세운 기업이 몰려드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심사 역량과 인력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아 재무제표 숫자 뒤에 있는 성장 잠재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들이 주관사 수임 경쟁을 하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기업을 마구잡이로 상장 심사에 올리는 것도 병목 현상이 누적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최석철/배정철 기자

천안함 앞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천안함 참전 장병과 현역 장병들이 22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6면 김범준 기자

한국경제TV 대표에 현승윤

한국경제TV는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전무이사(경영지원실장·사진)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경제부장, IT모바일부장, 편집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독자서비스국장 등을 지냈다.

한경미디어그룹 인사
▶한경엘앤디(포천힐스CC) 대표 송광림

PF부실 쇼크 … 저축은행 절반 무더기 적자

작년 전체 79社 5559억 손실
연체율 6.55% … 8년만에 최고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5000억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 업권이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커진 영향이다. ▶관련기사 A5면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는 총 55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가량인 41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작년 말 6.55%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작년 말 2.70%로 전년 말(1.19%) 대비 1.51%포인트 상승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형교/강현우 기자

위기에 휩싸인 애플 유럽 이어 美도 압박

법무부 "反독점법 위반" 제소
기업 분할·자산 매각 가능성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에서 경쟁사 앱을 배제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제한한 '폐쇄적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분할, 사업 부문 매각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련기사 A4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등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를 가리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꼬집었다.

CNBC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해소와 관련해 "구조적 구제책(structural relief)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조적 구제책은 통상 기업 분할, 자산 매각 등을 의미한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4.1% 떨어졌다.

김리안 기자

34개국 '원전 봉인 해제' 선언

유럽서 첫 원자력정상회의
신흥국 신규건설 지원 등 합의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기후 위기 속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원전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A10면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공동 개최한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위급 다자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국가는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첨단 원자로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봉인돼 있던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또 "모든 국가, 특히 신흥 원전 국가가 에너지 믹스(한 나라의 전력 발생원 구성)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데 합의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의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 중립'이라는 주요국의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수 전력으로 여겨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원전 가동 연장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관련표 A8, 9면

THE HYUNDAI

그림책에서 발견한 빛나는 잠재력,
제4회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발굴한 신진 작가의 그림책 7편을 선보입니다.
원화부터 작업 과정, 작품 연계 체험까지.
그림책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에게 한 편의 그림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2024. 3. 5(화) - 6. 30(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5층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 이지웰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24년 3월23일 토요일 11180호 3판 대표전화 1566-9595 1988년 5월15일 창간

한겨레 Saturday S

최지은·김보빈·이민준 아나운서(왼쪽부터)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티비에스(T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TBS 묵묵히 지키고 있는데 "정말 문 닫으라는 건가요?"

5면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
"식민피해 보상, 한국 몫" 왜곡 더 노골화
정부 "깊은 유감"…주한일본대사 초치

6·7면 정치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공천
'정부 견제론' 51%, '지원론' 36%

8·9면 종합
미국·유럽, 애플에 '반독점' 동시조준
김혜순 시인,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두 차례 공천 취소 뒤… 민주당 강북을 '친명 엔딩'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100% 수개표'

이번 총선에서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아 3번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이 첫 칸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가 둘째 칸을 차지한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선거 3% 득표 기준을 충족해 5번을 받는다.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이 있는 새로운미래는 6번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이재명 공천 마침표

등록 마감 6시간 앞 한민수 대변인 선택
박용진 사실상 세 번째 '비명횡사' 고배
이재명, 친명횡재 주장에 "한심한 얘기"
당 안팎서 "사당화 증거" 형평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수진 변호사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4·10 총선 후보로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인 한민수 대변인을 선택했다.

목함지뢰 피해자 '거짓 사과' 논란의 정봉주 전 의원과 아동 성폭행범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 변호사 공천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박용진 찍어내기'라는 무리한 공천이 드러났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 공천'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 대변인을 인준했다. 후보 자격을 부여하려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서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전권 위임했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절차상 검증 과정 없이 이 대표가 한 대변인을 낙점했다는 의미다.

한 대변인은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이 대표 캠프 공보수석으로 영입됐고,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을 지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2022년부터는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한 대변인은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에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이 확정됐던 18일 CBS라디오에서 "박 의원에게 재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도 무방하나, 반발도 있고 하니 또 준 것"이라며 '비명학살'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세 번이나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비명학살 친명횡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명 공천 아니냐'는 질문에 "참 한심한 얘기"라며 "한 대변인이 친명이면 경선 기회를 이렇게 안 줬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진짜 (한 대변인이) 친명이라면 단수공천을 했거나 경선 기회를 줬겠지, 지금까지 빼고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전략경선 차점자인 박 의원이 공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특혜'로 절하했다. 경선 기회를 이미 두 차례나 줬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은 두 번의 기회로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평가를 받았다"며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당에 오래 헌신했던 한 대변인을 후보로 결정하자는 게 최고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한 대변인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차려졌던 강북을 전략경선 후보 공모에 지원했지만, 당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강진구·정준기 기자

☞3면에 계속

日, 중학교 교과서 왜곡 수위 높였다
"강제동원 보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일본 식민 지배 책임을 더 흐려지게 변경
중립적 교과서도 "독도는 日 고유 영토"
외교부 "역사적 사실 부합하지 않아 유감"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더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중립적이라는 교과서마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등 역사 왜곡과 우경화 흐름이 심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18종(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한국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교과서 변경 사항 분석에 따르면 일본 중학 교과서는 4년 전 검정 때보다 가해 역사 책임 희석에 주력했다. 교과서들은 식민 지배에 대한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고 못 박았다. 특히 데이코쿠서원은 역사 교과서에 '1965년 일한기본조약에 의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고 새롭게 서술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자 일본도 노골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다는 기존 방향을 넘어 합법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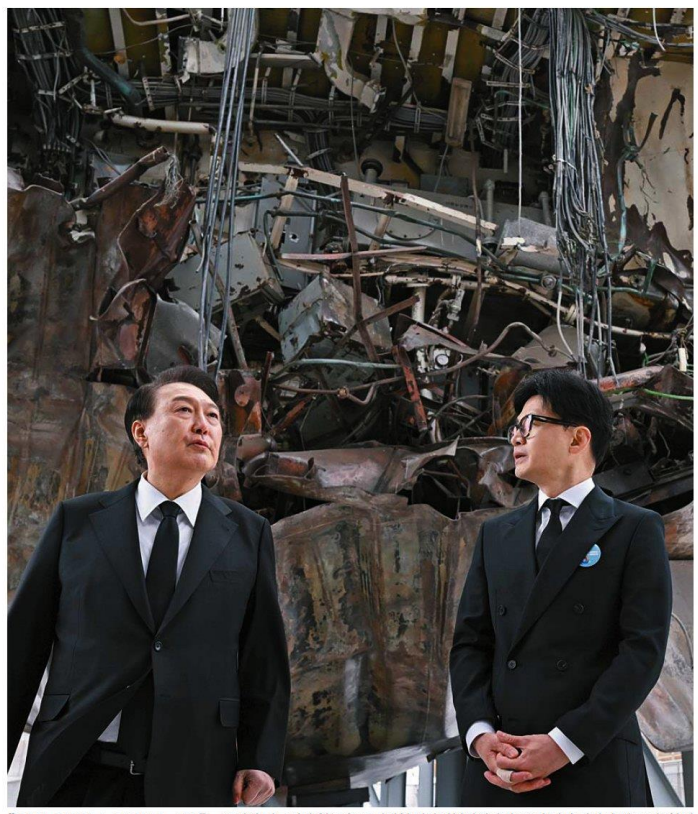
데이코쿠서원은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고, 지유샤는 '한국이 근거 없는 전시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고 기술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가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 정정' 사례를 실어 위안부 문제가 거짓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유샤는 공민 교과서에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았다.

독도 문제와 관련, 4년 전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대다수였다. 창씨개명을 식민지 시혜론 차원으로 기술(이쿠호샤)하거나,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한 교과서(지유샤, 이쿠호샤)도 있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도쿄=류호 특파원



"서해 영웅들 영원히 기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생명 나누는 삶은 축복입니다" 장기기증 사랑의 합창은 메아리 되어

장기기증 유가족·이식 가족 합창단
최연소 5세·최연장자는 80세 할머니
3대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유가족도
2015년부터 정기 공연… 지방도 찾아

너의 사랑이 나를 일으킨다. 보고파 널 부르다 목이 멘다 (장기기증 유가족이 작사한 노래 '꿈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김태현(65)씨는 2011년 늦둥이 아들 김기석(당시 16세)군을 떠나보냈다. 건강하던 아들은 학원에 가다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막연히 '기석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오래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장기기증을 떠올렸다"고 했다. 정 많던 어린 아들은 6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송종빈(69)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큰딸 송아신(당시 34세)씨를 잃었다. 딸은 사고로 뇌사에 빠졌고, 송씨는 생전 딸의 의사를 존중해 장기기증을 하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후배의 등록금을 내주고 유기견 보호단체를 후원하던 딸은 생명까지 나눴다. 딸의 신장은 10년간 투석해온 23세 대학생에게 기증됐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는 483명. 그에 비해 이식 대기자는 5만1,857명으로 100배가 넘는다. 매일 8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다. 장기기증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식의 생명을 나눈 두 아버지가 합창단을 꾸렸다. 김태현·송종빈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이사를 2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나 사연을 들어봤다. 이들이 8년째 운영 중인 합창단 '생명의 소리'는 장기기증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 등으로 구성됐다.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 지난해 11월 정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있다.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합창단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세계 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을 맞아 일회성 행사로 유가족과 수혜자들이 합창을 했다. 당시 합창에 참여한 송 이사는 "처음 무대에 서고 난 뒤 가슴속 답답했던 응어리들이 풀린 느낌이었다"고 했다. 사비 2,000만 원을 들여 합창단 창단에 앞장섰다. 합창단을 시작으로 2018년엔 재단법인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를 설립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 현재 합창단에는 장기기증 유가족(33명), 이식 수혜자(22명),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14명) 등 69명이 활동한다. 6년 전 합창단에 합류한 김 이사는 "처음에 합창 공연을 봤는데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합창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 보람이 느껴졌다"고 했다.

단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무대에 오른 최연소 단원은 5세, 최연장자는 80세다. 할머니와 사위, 외손자 등 3대(三代)가 함께 하는 유가족도 있다. 송 이사의 손녀(10)와 장기기증을 서약한 고등학생도 최근 합류했다. 김소희 기자 ☞2면에 계속

1954-2024 세상을 보는 균형

Weekend Special

한국일보

HANKOOKILBO.COM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제23619호

TOMMY TOMS COFFEE
2024 KLPGA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4.11~14
성공적인 개최를 탐앤탐스가 응원합니다.

천안함 찾은 尹·韓 당정 갈등 일단 봉합

이종섭·황상무 논란 이후 첫 만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를 두고 '2차 윤·한 갈등' 조짐을 보인 뒤 처음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함께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며 '당정 갈등 봉합'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함께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두 사람은 최원일 당시 함장으로부터 천안함 폭침 당일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번 만남은 이 대사 귀국, 황 전 수석 사퇴 문제로 두 사람이 충돌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요구를 모두 들어줬지만,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명단에서 제외된 '20년 지기'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곧바로 민생특별보좌관에 임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만난 후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을 가진 것은 서로 같다"고 강조했다.

손영하·정준기 기자 ☞5면에 계속

주말& 인사이드 Weekend Special

11 "병이 된 고독은 당신 잘못 아냐"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내가 유약해서"라고 자기 탓을 하곤 한다. 캐나다 트라우마 연구자인 가보 마테는 책 '정상이라는 환상'에서 병든 사회에서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12 한일 청춘들 입맛은 딱 통했다
한일 젊은이들이 식문화로 소통하고 있다. 서민적이고 활기 넘치는 우리 외식문화는 일본에서, 절제되고 고급스런 일본 서비스가 한국에서 환영 받고 있다.

내일 신문 쉽니다

★주말 날씨 16면

mk.co.kr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안내 : (02)2000-2114 제18045호 17판

美·유럽 동시 압박 사면초가 애플제국

美, 반독점 소송
"애플 생태계에 사용자 가뒀다"

EU, 플랫폼 규제
디지털법으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때릴수도

'애플제국'의 견고한 성(城)이 무너질 위기다. 그동안 애플 생태계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있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가 잇달아 지배적 지위를 견제하고 나섰다. 계다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에도 뒤처지면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지 1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16개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 조사한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고객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애플은 불법적인 독점으로 혁신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애플 생태계 개방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한다. DMA는 올해 시행한 법으로,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독점적 힘을 이용해 유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법이 발효되자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바꿨는데, 이 정책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관련기사 A3면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병		경기 화성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갑	
원희룡(국)	이재명(민)	방문규(국)	김영진(민)	한정민(국)	공영운(민)	이준석(신)	정진석(국)	박수현(민)	김태호(국)	김두관(민)	서병수(국)	전재수(민)
43%	48%	37%	45%	19%	51%	20%	49%	37%	47%	46%	40%	54%

*국=국민의힘·민=더불어민주당·신=개혁신당

李 48% 元 43%…명룡대전 접전

매경·MBN 총선 여론조사

수도권 野 우세 속 계양을 원희룡 5%P差로 이재명 추격
'낙동강 벨트' 양산을 박빙…지역구 후보자 699명 등록

여야가 22일 후보 등록을 마치며 4·10 총선의 개막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각 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맞서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승패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는 두 명의 대결은 이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A4·5·8·10·11면

손잡은 尹·韓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A8면 대통령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매일경제·MBN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20일 실시한 전국 주요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했다.

인천 계양을·경기 화성을·경남 양산을·부산 북갑·충남 공주부여청양(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포인트), 경기 수원병(표본오차 ±4.3%포인트) 등 6곳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 지지도는 48%, 원 전 장관은 43%였다. 이 대표가 5%포인트 앞서긴 했으나 오차범위 내에 있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 공 후보는 51% 지지도를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20%)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19%)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경기 수원병에서도 김영진 민주당 의원(45%)이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37%)를 앞서는 등 수도권 조사 대상 3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우위였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전개되고 있다. 경남 양산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47%)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46%) 간 격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한편 22대 총선에는 지역구 후보로 699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등이다. 서동철·전경운 기자

EU, 전쟁·기후위기에 '원전 유턴'

첫 원자력정상회의 개최
한국 포함 38개국 참석

글로벌 탈원전 기조를 이끌던 유럽이 10여 년 만에 원자력발전으로 '유턴'을 선언했다. 두 개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안보가 위협을 받는 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청정에너지라는 판단에서다. 한국 정부도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수도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한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원전 운영국 등 총 38개국이 참여했다. 특히 유럽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진해온 탈원전 기조를 빠르게 폐기하는 모양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용량 5위 국가"라며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량을 3배 확대하기 위한 유망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2면에 계속

진영태·고재원·홍혜진 기자

스위스·멕시코 금리 인하… 막오른 글로벌 피벗

월가 "각국 통화완화만 남아"
美·日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융 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피벗 시대'를 열었다. 스위스가 주요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앞으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연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관련기사 A6면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경제 전문가들의 동결 예상을 뒤집은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피벗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NB는 성명에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올해와 내년 인플레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사실상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인한 셈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리프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스위스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가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주요국 중 스웨덴, 유로존, 미국, 캐나다, 영국 순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 중앙은행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11%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주요 지수가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 계획을 유지해 연준의 피벗을 확인한 게 주효했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20번째 기록 경신이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일본 닛케이지수는 22일 하루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중 처음으로 4만 1000선을 돌파했고, 소폭 하락한 4만 888.43에 마감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국립 부경대학교 식품연구소의 오랜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폐(肺)와 기관지를 살려주는 호흡기 영양제 "목편한 세상"

미세먼지, 매연, 산업현장 탁한공기, 장기간 흡연 등으로 인한 기침, 가래가 심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기존 호흡기 문제가 악화되기도 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건강한 호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은 당연히 기관지와 폐 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이 시기에는 호흡기관의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해와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저하시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시중에서 가장 HOT 한 제품이 오늘 소개할려고 하는 진짜 효과 좋은 목편한세상 입니다. 기관지는 단순히 호흡을 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해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원래 폐,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목, 기관지, 면역력증진에는 "역시 도라지" 목과 기관지에는 예로부터 도라지가 으뜸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산도라지 관련 처방이 무려 278개 수록! 동의보감 속 도라지는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려주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삭혀준다고 적고있습니다. 특히 모과는 체력이 약하여 쉽게 피로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좋고 폐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안토잔틴· 사포닌 풍부한 도라지 기관지. 폐건강에도움 예로부터 도라지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도라지는 가래와 고름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목감기·호흡곤란 등을 완화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목감기· 호흡곤란 완화 효과는 안토잔틴과 사포닌 성분 덕분인데요 안토잔틴은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 세균 등으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고 중요한 호흡기관인 폐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객원기자 이준호〉

하루 한 포 흡연, 매연, 미세먼지로 지친 폐와 기관지를 건강하게!
폐와 호흡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산소 및 이산화탄소 교환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목편한 세상"은 순수 천연물질로 만들어 폐와 기관지 등에 다양한 영양성분을 공급해 전반적인 호흡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목편한 세상"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섭취가능)
■ 기침을 많이 하는 분 ■ 장기간 흡연하는 분 ■ 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 ■ 호흡이 불편한 분 ■ 먼지 많은 곳에 근무하는 분 ■ 환절기때마다 목이 불편한 분 ■ 목과 기관지가 불편한 분 ■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 ■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 어르신들 ■ 분진이 많은 산업체, 건설현장 종사자 등

한 포만 드셔도 목과 기관지가 하루 온종일 상쾌합니다.

100분 한정특별할인 이벤트
목편한세상 / 1세트 2박스 : 39,800원
(2+1) 2세트 구입시 1박스 추가증정

면역력 필수시대 폐, 기관지 영양제 | 미세먼지, 황사, 흡연 호흡기 기능개선 | 100% 천연 자연유래 성분

문의 1522-6733

농협 : 351-1163-4322-03 (주) 하이마켓24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능 (택배비 3,000원 소비자부담)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오늘의 뉴스 브리핑

03월 23일 (토요일) 조간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페이지	매체명	기사 제목	면정보
< 주요 1면 >			
3	조선일보	"정부 견제해야" 4년 전보다 늘었다	종합 01면
4	중앙일보	후보 등록 마감날 끝까지 파행 공천	종합 01면
5	동아일보	전과자-反美-피고인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종합 01면
6	한국경제	최장 11개월 … 'IPO 가는 길' 꽉 막혔다	종합 01면
7	한겨레	TBS 묵묵히 지키고 있는데 "정말 문 닫으라는 건가요?"	종합 01면
8	한국일보	두 차례 공천 취소 뒤… 민주당 강북을 '친명 엔딩'	종합 01면
9	매일경제	美·유럽 동시 압박 사면초가 애플제국	종합 01면
< 주택·토지 관련 기사 >			
10	매일경제	과천주공 8·9단지, 최고 35층 추진	종합 02면
11	한국경제	LH, 사회공헌 혁신위 발족	인물 21면
11	서울경제	LH '사회공헌혁신위' 발족…위원장 오준 전 유엔대사	인물 22면
12	매일경제	금리 내리면 볕드는 리츠 시장 … 국내·대형·오피스 주목하라	금융/재테크 18면
13	조선일보	부동산PF 연체율 2.7%로 또 상승 저축銀은 7% 육박	경제 17면
14	동아일보	저축은행 9년만에 적자… 작년 5559억 순손실	종합 08면
15	매일경제	PF 부실 여파 …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경제 13면
16	한국경제	PF부실 쇼크 … 저축은행 절반 무더기 적자	종합 01면
16	한국경제	'충당금 덫'에 걸린 저축銀, 9년 만에 적자	종합 05면
17	한국경제	부동산 PF 잔액 135.6조 연체율 1년새 2배 치솟아	종합 05면
18	서울경제	PF 연체율 3% 달하는데 위기설 선 그은 금융당국	금융/재테크 06면
19	한국경제	[사설] 부동산 PF 부실 전이 막아야 … 금융권도 자제 필요하다	사설/칼럼 23면
20	KBS	'할인 계약, 공사비 인상'...부동산 불황에 분쟁 잇따라	경제
21	news1	"대출 조이자 더 오르네"...서울 아파트 전셋값 4주 연속 상승	종합
22	NEWSIS	아파트 입주장 끝나자 전셋값 ''쑥''...물량 줄어 상승세 이어질 듯	부동산
23	news1	잠실 헬리오·주공 5단지 1억원 '쑥'...서울 매매수급지수 6주째 '상승'	종합
24	뉴스핌	월세 고공행진에도 오피스텔 ''인기''...분양 시장서 ''흥행'' 이어갈까	부동산
25	뉴스핌	캠코, 국유부동산 153건 공개 대부 및 매각	금융/재테크
< 국토·도시·건설 관련 기사 >			
26	세계일보	전국 파크골프장 400곳… 체육시설 넘어 관광인프라 역할	기획 08면
27	매일경제	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경제 13면
28	서울경제	대우건설, iF 디자인 3년 연속 수상	금융/재테크 06면
29	동아일보	[사설] '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사설/칼럼 27면
30	한국경제	[취재수첩] 중구난방 행정구역 개편논의, 기준 마련해야	오피니언 22면
31	KBS	강풍에 타워크레인 휘어...케이블카도 '중단'	사회
32	MBC	"크레인 일부가 300미터나 날아가 " 대형 크레인 꺾여 추락	사회
33	SBS	크레인 휘고 케이블카 멈추고...전남 곳곳 강풍 피해	사회
34	MBC	태영, 최대 사업장도 '삐그덕' 저축은행 PF 연체 7%	경제
35	SBS	9년 만에 적자 · 치솟는 연체율...저축은행 '경고등'	경제
36	YTN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또 제동	사회
37	YTN	[자막뉴스] 풀만 무성했던 내 땅...그린벨트에 드디어 '희소식'	경제
38	NEWSIS	법원, ''부실시공''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제동(종합)	사회
39	news1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종합
40	뉴스핌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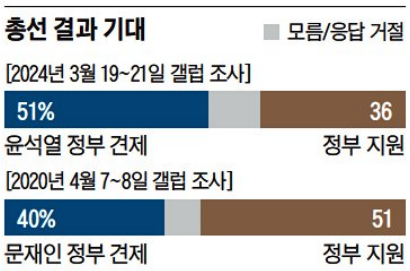
41	연합뉴스	60명 탄 여수해상케이블카, 30분간 공중서 멈춰(종합)	종합
42	뉴스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수행 중 애로사항, 문의하세요"	부동산
43	NEWSIS	국토안전관리원, 선제적 안전관리 'CSI 사용자 매뉴얼' 배포	사회
44	news1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CSI 사용자 매뉴얼' 배포	종합
< 교통·물류·모빌리티 관련 기사 >			
45	매일경제	전기차 보조금 '아이오닉6' 700만원 '폴스타2' 163만원	기업 14면
< 도로·철도·항공 관련 기사 >			
46	매일경제	"지하철 진입 순간 긴장 … 여성 노린 '나쁜 손' 다 잡아냅니다"	사회 17면
47	조선일보	청주공항이 '빅 5'로 급부상한 까닭은?	기획 B03면
48	서울경제	<1>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장 교체투입…통합 시너지 높인다	산업/무역 10면
49	SBS	[단독] 역주행 방지장치 없다더니...설치됐는데도 '우르르'	사회
50	YTN	GTX-A 수서·동탄 요금 4,450원...'철도 지하화' 시동	경제
53	YTN	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져...주 1,450석→주 21회	경제
54	뉴스핌	교통안전공단, 국내최초 대형변압기 수송 특수화물열차 ''슈나벨카'' 승인 추진	부동산
55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공항 성격 등 두고 법정 공방	종합
56	news1	이스타항공 전 인사팀장 "당시 국토부 직원 자녀 합격 후 대표에 문자"	종합
< 보도자료 인용 기사 >			
57	매일경제	철도지하화 시동 … 연내 대상노선 선정	경제 13면
58	YTN	"경인선부터 철도 지하화"...채권 발행해 재원 마련	경제
59	news1	박상우 국토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교통안전교육 일일강사 참여	종합
60	NEWSIS	박상우 국토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일일강사로	부동산
61	NEWSIS	강희업 대광위원장, GTX 운정역.환승센터 건설현장 점검	경제
< 기타 >			
62	조선일보	수원·화성·용인 '반도체 벨트'도 국민의힘 고전	정치 03면
63	중앙일보	출마자 699명 평균 나이 56.8세 … 10명 중 8명이 5060	선거 04면
64	동아일보	여야 '위성정당 꼼수' 25억 챙기고… 무자격논란 인사, 당선권에	선거 03면
65	한국경제	IPO 지연에 속타는 기업들… "투자 유치·신사업 물건너갔다"	종합 03면
66	한겨레	[커버스토리] '폐국'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현실 "'편향 낙인' 대신 34년 역사 봐주길	기획 02면
69	한국일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여성 14% 그쳐… 전과 11범도 등록	정치 03면
70	매일경제	"고객·경쟁사·앱개발사 모두 피해" … 美정부 '애플 생태계' 정조준	기업 03면
71	서울경제	"전력기금 손질"…내주 부담금 개편 발표	종합 01면
71	서울경제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종합 04면
72	조선일보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중국	종합 01면
73	조선일보	中의 초저가 공습… 美·EU, 관세로 맞서	경제 10면
74	조선일보	배터리·철강… 中이 보조금 쏟아 키운 산업들 줄줄이 공급 과잉	경제 10면
75	NEWSIS	''국가 조작통계 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사건 재배당	대전/충남
76	조선일보	[인사]	인물 25면
76	조선일보	[부음]	인물 25면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정부 견제해야” 4년 전보다 늘었다

총선 D-18, 민심의 현주소

갤럽 조사 “尹정부 심판” 51%
지난 총선 “文정부 심판” 40%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36%보다 15%포인트 많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의 58%도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만이 여당 승리를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총선 일주일 전인 4월 7~8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1%였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40%였다. 둘의 격차는 11%포인트로 현재의 15%포인트보다 작았다. 이런 여론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보수가 기록적 패배를 기록한 2020년보다도 더 ‘정권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투표일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 발표하는 지역구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8~20일 시행한 조사에서 서울 종로의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49%로, 31%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18%포인트 앞섰다. 승부처인 ‘반도체 벨트’ 경기 화성을에서도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42%를 받은 반면, 국민의힘 한정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20%에 못 미쳤다. 성남 분당갑·을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김병욱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19~20일 조사한 여론은 수원병에서도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45%로, 국민의힘 방문규 후보 37%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필·김태준 기자 A3면에 계속

2024년 03월 23일 (토)
The JoongAng
종합 01면

후보 등록 마감날 끝까지 파행 공천

성지원·신수민·이가람·전민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22일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 699명 등록

여, 비례당에 의원 5명 '긴급 대여'

야, 조수진 대신 한민수 '벼락 공천'

여야 모두 청년·여성 공천 뒷걸음

여성, 21대보다 5%P줄어 14.2%

2030비율 6.1%→5.4%로 감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후보등록이 22일 마감됐다. 공천 과정에서 분란이 쇄신보다 앞섰던 거대 양당은 후보등록 막판까지 우왕좌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계 한민수 후보를 서울 강북을에 공천했다. 현역 박용진 의원은 세 번째 외면당했다. 전날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5명의 지역구 의원을 입당시켰다.

양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혁과 쇄신, 여성·청년 중용을 약속했지만, 말에 그쳤다. 오히려 후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전체 의석 300석 중 254석)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21곳, 지역구 후보는 699명이었다. 민주당이 246명, 국민의힘이 254명을 공천했고,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 28명,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1명, 진보당 21명(기호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00명, 여성 99명(14.2%)이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성 비율 19.1%보다 4.9%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보자 4명, 30대 후보자 34명으로 2030세대의 비율은 5.4%에 그쳤다. 4년 전 총선 당시 2030 후보 비율은 6.1%였다. 반면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81.9%(562명)였다. 80대 후보도 3명에 달했다. 최연장자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일윤(85) 무소속 후보이고 최연소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우서영(28) 민주당 후보였다.

양당은 그간 여성·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해왔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월 12일 첫 회의에서 "젊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를 중점적으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1월 16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특히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의 평균 연령은 57.4세이었고 2030세대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11.8%였다. 민주당도 지역구 후보 평균 연령이 56.6세, 2030세대 비율이 3.7%에 그쳐,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여성 비율만 16.7%로 평균보다 높았을 뿐이다.

전체 후보자 가운데 재산신고 1위는 경기 부천갑의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로, 1446억6700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1401억3500만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였다.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 후보였다.

▶4면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東亞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전과자-反美-피고인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여야 위성비례정당 등 38개 난립
졸속 검증 후보들 당선권에 배치
'전문가 등 배려' 비례 취지 외면

총선 D-18

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모두 인정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는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이후 생긴 기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반미 시위 참여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틈을 타 양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채연 기자

▶3면에 관련기사

한국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최장 11개월 … 'IPO 가는 길' 꽉 막혔다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얼마 전 한국거래소의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해 2월 신청했는데 11개월 만인 올 1월 심사를 통과했다. 이 회사는 오는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예비심사부터 상장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관련기사 A3면

상장 추진 기업이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에 6개월 넘게 묶여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초 한두 달 남짓이던 심사 기간이 길어져 새롭게 신청한 기업 수십 곳이 정체 대열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자본시장의 핵심 통로에서 역대급 '병목' 현상이 벌어지며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 '역대급 병목' … 자금조달 차질

상장 심사기간 계속 지연 … 지난해 평균 85일
규정상 45일내 끝내야 … 특례상장 증가 영향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예비심사를 받는 곳은 41곳이다. 이 중 28곳이 지난해 하반기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간과 대상 기업 수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엔셀 등 바이오 회사 2곳은 8개월째 심사 중이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심사 신청을 받은 뒤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원활한 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규정이다. 그런데 최근 원칙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거래소의 평균 심사 기간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50일이 안 됐지만, 매년 늘어 지난해 85.4일에 달했다. 올해는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계에서는 바이오·플랫폼·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세운 기업이 몰려드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심사 역량과 인력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아 재무제표 숫자 뒤에 있는 성장 잠재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들이 주관사 수임 경쟁을 하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기업을 마구잡이로 상장 심사에 올리는 것도 병목 현상이 누적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최석철/배정철 기자

한겨레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최지은·김보빈·이민준 아나운서(왼쪽부터)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티비에스(T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TBS 묵묵히 지키고 있는데 “정말 문 닫으라는 건가요?”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일보
종합 01면

두 차례 공천 취소 뒤… 민주당 강북을 '친명 엔딩'

이재명 공천 마침표

등록 마감 6시간 앞 한민수 대변인 선택
박용진 사실상 세 번째 '비명횡사' 고배
이재명, 친명횡재 주장에 "한심한 얘기"
당 안팎서 "사당화 증거" 형평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수진 변호사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4·10 총선 후보로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인 한민수 대변인을 선택했다.

목함지뢰 피해자 '거짓 사과' 논란의 정봉주 전 의원과 아동 성폭행범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 변호사 공천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박용진 찍어내기'라는 무리한 공천이 드러났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 공천'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 대변인을 인준했다. 후보 자격을 부여하려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서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전권 위임했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절차상 검증 과정 없이 이 대표가 한 대변인을 낙점했다는 의미다.

한 대변인은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이 대표 캠프 공보수석으로 영입됐고,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을 지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2022년부터는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한 대변인은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에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이 확정됐던 18일 CBS라디오에서 "박 의원에게 재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도 무방하나, 반발도 있고 하니 또 준 것"이라며 '비명학살'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세 번이나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비명학살 친명횡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명 공천 아니냐'는 질문에 "참 한심한 얘기"라며 "한 대변인이 친명이면 경선 기회를 이렇게 안 줬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진짜 (한 대변인이) 친명이라면 단수공천을 했거나 경선 기회를 줬겠지, 지금까지 빼고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전략경선 차점자인 박 의원이 공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특혜'로 절하했다. 경선 기회를 이미 두 차례나 줬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은 두 번의 기회로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평가를 받았다"며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당에 오래 헌신했던 한 대변인을 후보로 결정하자는 게 최고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한 대변인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치러졌던 강북을 전략경선 후보 공모에 지원했지만, 당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강진구·정준기 기자

☞3면에 계속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美·유럽 동시 압박 사면초가 애플제국

그림_정진동

美, 반독점 소송
"애플 생태계에 사용자 가뒀다"

EU, 플랫폼 규제
디지털법으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때릴수도

관련기사 A3면

'애플제국'의 견고한 성(城)이 무너질 위기다. 그동안 애플 생태계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있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가 잇달아 지배적 지위를 견제하고 나섰다. 게다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에도 뒤처지면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지 1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16개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 조사한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고객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애플은 불법적인 독점으로 혁신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애플 생태계 개방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한다. DMA는 올해 시행한 법으로,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독점적 힘을 이용해 유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법이 발효되자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바꿨는데, 이 정책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2024년 03월 23일 (토)
매일경제
종합 02면

과천주공 8·9단지, 최고 35층 추진

市, 사업시행계획 인가
재건축땐 2829가구 규모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8·9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청은 최근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구체적으로 수립한 재건축 계획을 구청장이 인가하는 절차로 흔히 정비사업의 '7부 능선'이라 불린다. 이후 남은 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철거·착공뿐이다.

과천주공8단지는 1983년에 최고 15층, 12개 동, 140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바로 옆에 자리한 과천주공9단지는 1982년에 최고 5층, 17개 동, 720가구로 건립됐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두 단지는 용적률이 128%로 낮은 편이다. 용적률이 180% 이하면 사업성 좋은 단지로 평가받는다.

과천주공8단지 전경. 매경DB

계획안에 따르면 과천주공8·9단지는 앞으로 최고 35층, 27개 동, 282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평형은 전용면적 59·74·84·94·99·119·124·134·139㎡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펜트하우스 7가구와 테라스형 84가구도 짓는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00가구가량이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은 약 286%, 건폐율은 약 20%, 최고 높이는 약 113.9m로 정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해 단지명이 '디에이치 르블리스'로 바뀔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한국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인물 21면

LH, 사회공헌 혁신위 발족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오른쪽)가 22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오준 전 유엔대사(왼쪽)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LH 사회공헌 방향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맡는다.

서울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인물 22면

LH '사회공헌혁신위' 발족…위원장 오준 전 유엔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 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사회공헌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오준 전 유엔대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LH 사회 공헌 방향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통해 LH 고유의 사회 공헌 브랜드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사업 체계 및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국민 주거 안심 △저출생 대응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3대 사회 공헌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 이슈 해결과 국민 만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한준(오른쪽) LH 사장이 21일 경기도 성남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사회공헌혁신위원회' 발족 행사에서 오준 전 유엔대사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 제공=LH

LH는 위원회를 기반으로 주거 문제, 저출생 대응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사회 공헌 브랜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민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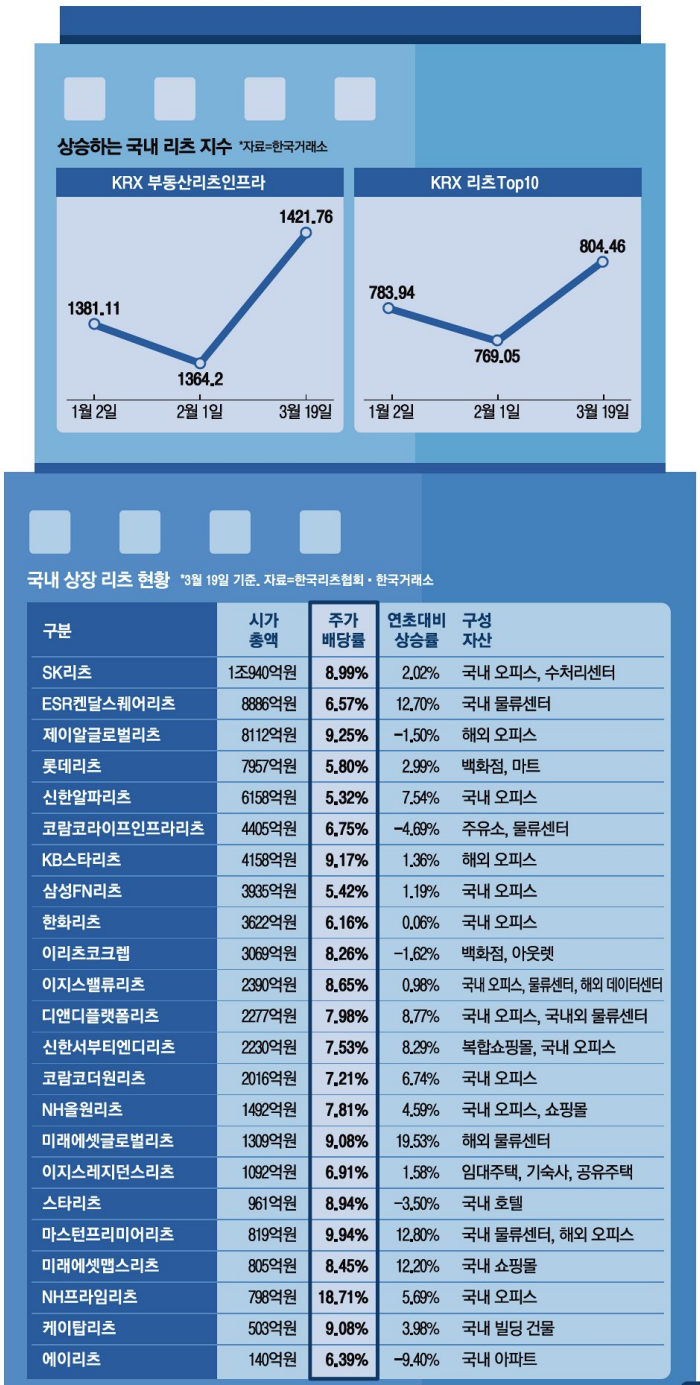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금융/재테크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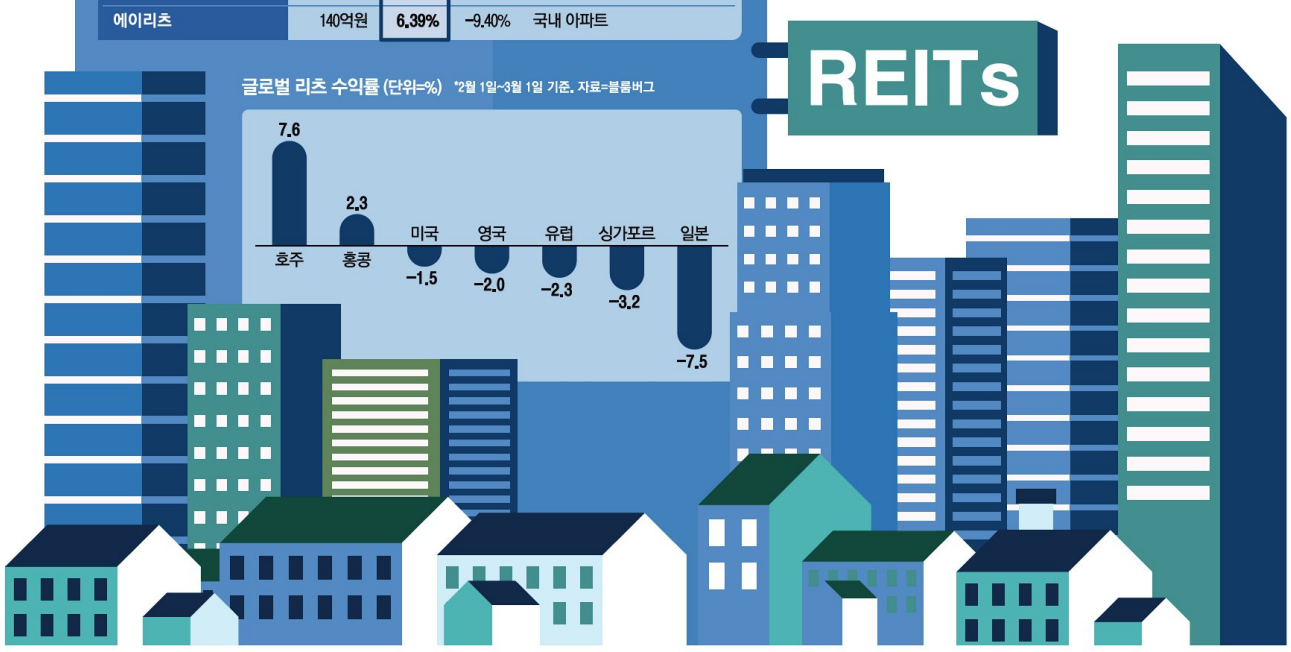
금리 내리면 볕드는 리츠 시장… 국내·대형·오피스 주목하라

고금리 환경과 국내외 부동산 위기 때문에 함께 부진했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편입된 자산 수익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금이 리츠를 살 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상장 리츠 현황 *3월 19일 기준. 자료=한국리츠협회·한국거래소

구분	시가 총액	주가 배당률	연초대비 상승률	구성 자산
SK리츠	1조940억원	8.99%	2.02%	국내 오피스, 수처리센터
ESR켄달스퀘어리츠	8886억원	6.57%	12.70%	국내 물류센터
제이알글로벌리츠	8112억원	9.25%	-1.50%	해외 오피스
롯데리츠	7957억원	5.80%	2.99%	백화점, 마트
신한알파리츠	6158억원	5.32%	7.54%	국내 오피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4405억원	6.75%	-4.69%	주유소, 물류센터
KB스타리츠	4158억원	9.17%	1.36%	해외 오피스
삼성FN리츠	3935억원	5.42%	1.19%	국내 오피스
한화리츠	3622억원	6.16%	0.06%	국내 오피스
이리츠코크렙	3069억원	8.26%	-1.62%	백화점, 아웃렛
이지스밸류리츠	2390억원	8.65%	0.98%	국내 오피스, 물류센터, 해외 데이터센터
디앤디플랫폼리츠	2277억원	7.98%	8.77%	국내 오피스, 국내외 물류센터
신한서부티엔디리츠	2230억원	7.53%	8.29%	복합쇼핑몰, 국내 오피스
코람코더원리츠	2016억원	7.21%	6.74%	국내 오피스
NH올원리츠	1492억원	7.81%	4.59%	국내 오피스, 쇼핑몰
미래에셋글로벌리츠	1309억원	9.08%	19.53%	해외 물류센터
이지스레지던스리츠	1092억원	6.91%	1.58%	임대주택, 기숙사, 공유주택
스타리츠	961억원	8.94%	-3.50%	국내 호텔
마스턴프리미어리츠	819억원	9.94%	12.80%	국내 물류센터, 해외 오피스
미래에셋맵스리츠	805억원	8.45%	12.20%	국내 쇼핑몰
NH프라임리츠	798억원	18.71%	5.69%	국내 오피스
케이탑리츠	503억원	9.08%	3.98%	국내 빌딩 건물
에이리츠	140억원	6.39%	-9.40%	국내 아파트



찬밥 신세는 옛말… 리츠 투자 키워드 꼽아보니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리츠 배당 기준을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내 리츠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국내 부동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데다 해외에서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투자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 생각하고 리츠 투자에 뛰어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리츠의 대세 상승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만큼 '위험 요소'가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힌트가 있다. '국내' '대형' '오피스',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할 때다.

국내 리츠 지난해 저점 찍어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 자금으로 국내외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매입·매각하거나 임대해주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개인이 높은 가격의 건물이나 해외 부동산을 직접 사고팔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한 효과를 보는 셈이다.

자산운용사가 자금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간접투자
임대수익·매각 차익 나눠줘

금리 인하땐 조달비용 줄어
자산 수익률 더 오를 수 있고
정부 배당규제 완화 추진에
평가손실 생겨도 稅감면 매력

해외보다 공실률 낮은 韓빌딩
신용등급 높은 대형 리츠 유리

공급과잉 우려 물류센터보다
수요 많아 부담 작은 오피스
장기임대 리테일 눈여겨볼 만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시중금리나 웬만한 주식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초반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꽤 끌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연 7.8%를 기록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 23개 중 5개는 10%가 넘는 배당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상장할 때마다 수십~수백 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곤 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PF 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 투자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Top10지수'는 3월 19일 기준 804.46으로 최근 1년 내 최저점(지난해 10월 23일, 732.21)과 비교해 72.25포인트(9.9%) 올랐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스트럭처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도 작년 10월 23일 1299.85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 19일 기준 1421.76까지 올라 있다. 두 지수 모두 작년 10월까지 꾸준히 하락한 이후 회복세다.

리츠 수익률 높이는 정부 정책 집중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의 주요 키워드로 리츠를 제시하는가 하면 배당 확대 등 리츠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 부분도 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는 평가다. 이익 배당 기준을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을 빼고 배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리츠가 100억원의 배당 가능 이익을 냈지만 50억원의 평가손실이 나면 50억원만 배당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법인세 면제도 받기 어려웠다. 현행 법인세법상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면 배당률이 떨어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 배당 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에게 나눠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올 8~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츠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우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AMC 설립 기간을 단축했다. 이제까지 AMC 설립은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까지 2단계로 구성돼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그사이 금리가 변동되는 등 자산 매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AMC 설립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리츠에 주목하고 있고, 리츠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동안 찬밥 신세였던 리츠 투자 매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PF 구조조정 등 위험 존재…선별 접근해야

리츠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 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데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리츠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우선 해외보다는 한국 리츠의 투자 매력이 높다. 리츠가 투자한 자산의 경기 상황 때문이다. 국내 리츠는 주로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리테일 자산을 담고 있다. 국내 오피스 빌딩은 실질 공실률이 3% 미만일 정도로 수요가 많고, 리테일도 장기간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 공실 부담이 작다. 반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의 주요 도시 오피스 공실률은 19.6%에 달해 집계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최고치다. 유럽 주요 도시들도 미국보다는 양호하지만 8%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리츠 평균 주가는 연초 대비 지난달까지 4.1% 하락했다. 반면 한국 리츠는 1.7% 상승했다.

두 번째로는 중소형 리츠보다 대형 리츠가 유리하다.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은 대형 리츠들의 혜택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형 리츠의 경우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 대형 리츠보다 자금 조달비용이 커져 배당 희석 우려가 큰 만큼 둘 사이 자산 규모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이 큰 리츠와 높은 차입 부담으로 할인율이 높아진 대형 리츠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저 싼 리츠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소형 리츠나 경제환경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리츠, 전략이 모호한 리츠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츠 편입 자산 형태로 따지면 국내 리츠는 앞서 말했듯 오피스와 리테일 분야를 주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급 과잉 문제가 떠오르는 물류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리츠는 확실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 등 해외 리츠는 오피스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노인주거, 데이터센터, 쇼핑몰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실제로 최근 미국 리츠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웰타워(Welltower)는 미국 노인시설을 집중 보유한 헬스케어 리츠다. 노인주거시설 임차율 회복, 임대료 상승, 인건비 완화를 이유로 올해 10.4%의 성장률이 제시되고 있다.

손동우 부동산·도시계획전문기자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경제 17면

부동산PF 연체율 2.7%로 또 상승 저축銀은 7% 육박

PF 대손충당금·고금리 여파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전환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전(全)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2.42%에서 2.7%로 0.28%포인트 올랐다. 2022년 말(1.19%)에 비해서는 1.51%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던 2012년(13.6%)보다는 낮다. 금감원은 "과거에 비해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고 금융사들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업권이 13.7%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업권은 7%에 달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PF 대출 부실 여파로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금융 당국 권고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은 영향이 컸다. 작년 충당금은 전년 대비 50.5%(1조3000억원) 증가한 3조8731억원에 달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조달 비용도 83.4% 늘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5조3508억원을 썼다.

작년 말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로 전년 대비 3.64%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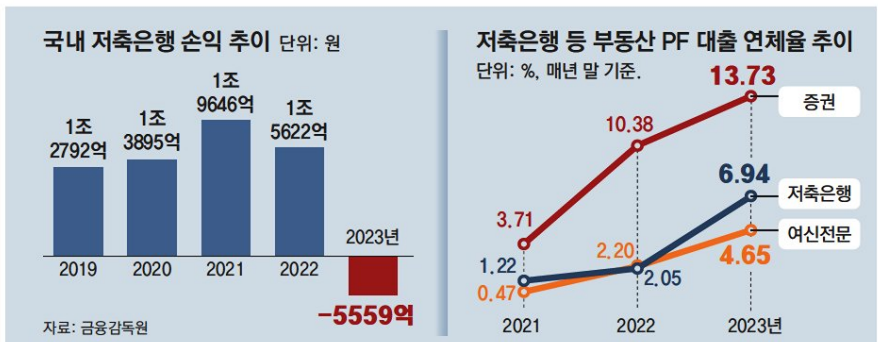
東亞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8면

저축은행 9년만에 적자… 작년 5559억 순손실

이자비용 증가 속 PF부실 겹쳐
연체율 6.6% 12년만에 최대폭↑
금융권 PF대출 136조로 늘어
"구조조정 본격화땐 뇌관될 수도"



국내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마무리됐던 2014년 이후 첫 적자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9년 만의 적자 전환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낸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정지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절반가량의 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로 나간 비용이 전년보다 2조4331억 원(83.4%) 늘어난 데다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보다 3.14%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큰 기업 대출 연체율(8.02%)이 5.12%포인트 급등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7.72%로 3.64%포인트 뛰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여전히 규제 비율(7~8%)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였던 2011년 말 연체율은 20.3%였다.

● "PF 구조조정 본격화 땐 흔들릴 수도"

올해도 저축은행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다.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계속되는 탓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현재로선 충당금 적립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실적이 저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늘었다. PF 대출 연체율도 2.7%로 전년보다 1.5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89%포인트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증권(3.35%포인트), 상호금융(3.03%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연착륙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흔들리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떠올릴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저축은행과 중소 증권사 같은 경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경제 13면

PF 부실 여파…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저축銀 79곳 작년 실적 분석

이자이익 줄며 5600억 순손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총 5600억원 규모 손실을 내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순손실 규모는 총 5559억원이었다. 2022년 총 1조 5622억원 순이익을 거뒀던 것이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에 5089억원 적자를 낸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저축은행들의 적자 배경에는 이자 비용 상승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이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1조3411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전년보다 약 83% 늘어난 반면 이자 수익 증가폭은 11%에 그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도 겹치면서 지난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조8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도 올랐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 급등했다.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도 7.72%로 전년 말(4.08%)보다 3.6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여신 영업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인 것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약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9.6%) 감소했다. 총수신도 같은 기간 약 12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원(8.7%) 줄었다.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PF 펀드 등을 조성해 PF 사업장 재구조화, 개인사업자대출 민간 매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율 상승폭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5.8%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크지만 연체율은 2011년 말(20.3%)보단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경제
종합 01면

PF부실 쇼크 … 저축은행 절반 무더기 적자

작년 전체 79社 5559억 손실
연체율 6.55% … 8년만에 최고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5000억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 업권이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커진 영향이다. ▶관련기사 A5면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는 총 55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가량인 41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작년 말 6.55%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작년 말 2.70%로 전년 말(1.19%) 대비 1.51%포인트 상승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형교/강현우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경제
종합 05면

'충당금 덫'에 걸린 저축銀, 9년 만에 적자

작년 79社 5559억 손실

저축은행이 9년 만에 적자 늪에 빠지면서 무더기 영업정지로 이어진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21일 설명회를 열어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자 비용·충당금 급증

지난해 저축은행의 손실이 커진 것은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직후 금융권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고금리 예금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저축은행 이자 비용은 전년(2조9177억원) 대비 83.4% 폭증한 5조3508억원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따른 직격탄도 맞았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PF 대출이 포함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90%에서 8.02%로 세 배가량으로 폭등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 규모는 3조8731억원으로 전년(2조5731억원) 대비 50.5%(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압박하면서 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만 41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를 낸 상당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 요구를 반영하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당국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

저축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위기감을 경계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사전 설명회까지 열었다. 금융권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PF 부실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작년 3.8조 … 전년 대비 1.3조↑
고금리에 이자비용도 83% 폭증
진화나선 당국 "손실흡수력 충분"

새마을금고 순익 '20분의 1토막'

걸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은 최근 3~4년간 매년 2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저축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인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은 25.1%에 달했다.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로, 과거(27.0%)와 비교하면 4분의 1가량으로 낮다.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14.4%로 과거 사태 당시(1.1%)뿐 아니라 안정 수준으로 여겨지는 8%를 웃돈다. 박 부원장보는 "7월부터는 저축은행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유동성 지원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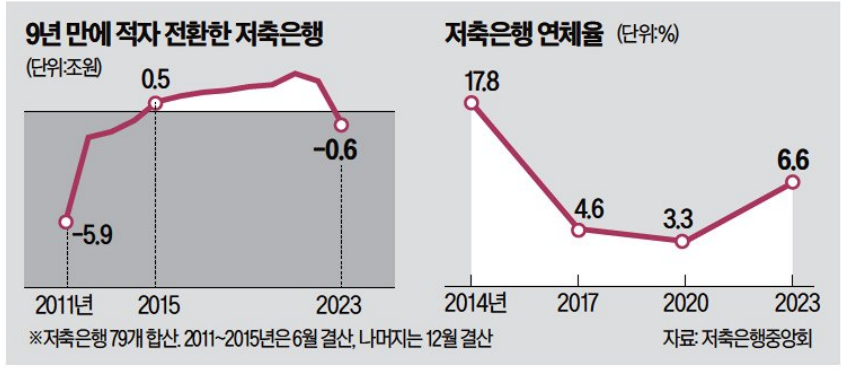
◆살얼음판 계속될 듯

하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발(發) 살얼음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5573억원) 대비 20분의 1토막 났다. 연체율은 5.07%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상승했다. 신협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95.6% 줄어든 251억원이었다.

조미현/서형교/최해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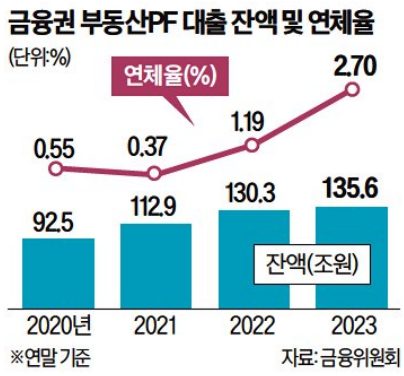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경제
종합 05면

부동산 PF 잔액 135.6조 연체율 1년새 2배 치솟아

증권사 연체율 13.73%로 '최고'
7% 육박한 저축銀 상승폭 최대
금감원 "PF사업장 정상화 속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한 7%에 육박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2.70%에 달했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했다. 1년 전(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증권과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하반기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은 연체액이 감소했다기보다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의 PF 잔액은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가구 대비 적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연착륙 정상화 방안이 본격 실행되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 PF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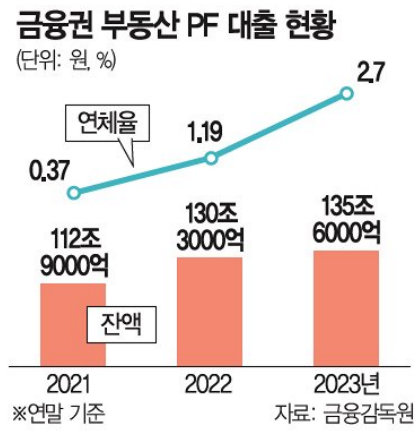
강현우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서울경제
금융/재테크 06면

PF 연체율 3% 달하는데 위기설 선 그은 금융당국

작년말 금융권 PF 대출현황

전년보다 1.51%P 오른 2.7%
저축은행 6.94%로 상승률 1위
금감원 "건전성관리 가장 안정"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넘게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7% 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로 집계됐다. 전년 말(1.19%)와 비교하면 1.51%포인트나 올랐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0.28%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6.94%로 한 분기 만에 1.38%포인트 급등했다.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연체율도 같은 기간 각각 0.35%포인트, 0.21%포인트 올랐다. 증권사의 경우 0.11%포인트 하락했지만 13.73%를 기록해 금융 업권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출 잔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 원으로 전 분기(134조 3000억 원) 대비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1조 8000억 원), 증권(1조 5000억 원)은 늘어났고 보험(1조 3000억 원), 저축은행(2000억 원), 여신전문사(2000억 원) 등은 감소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기는 했지만 금융사 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위기가 불거진 2012년 말 연체율(13.62%)에 견줘보면 현재 연체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분양 주택도 6만 2000가구 수준으로 16만 6000가구에 달했던 2009년 말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거 부동산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해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중섭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경제
사설/칼럼 23면

부동산 PF 부실 전이 막아야 … 금융권도 자제 필요하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작년 12월 말 135조6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이 기간 2.42%에서 2.70%로 높아졌다.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특히 심각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1.38%포인트 오른 6.94%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증권사 연체율은 0.1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3.73%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시장 불안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과 PF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2012년 말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였다는 점에 비춰 현재 연체율은 낮은 편이고 주택 미분양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6만6000가구보다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총 5559억원에 달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에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까지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위기 때 더 취약하다.

또 상당수 PF 대출 사업장은 대출 만기 연장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사는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과도한 금리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 중단 위기에 빠지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PF 부실 불똥이 신탁사로 튀는 경우도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중소 건설사가 제때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PF에 돈을 댄 대주단이 건설사 대신 보증을 선 신탁사에 원리금 상환과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탁사가 준공을 확약한 사업장이 전국에 1000여 곳에 달하고 관련 금액이 17조원을 넘는다. 자칫하면 PF 부실이 신탁사의 모그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PF 부실이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 수준의 이자·수수료를 요구해 정상 사업장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년 03월 22일 21:55 (금)

KBS

경제

‘할인 계약, 공사비 인상’…부동산 불황에 분쟁 잇따라

[KBS 대구]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계약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가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아파트에 가압류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사는 미분양 물량이 80%가 넘자 최근 공개 매각에 나섰는데, 입주민들이 분양가보다 3억 원이나 낮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분양가가 떨어지면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탁사 등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성엽/아파트 입주민 비대위원장 : "다시 매매를 하거나 하면 기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반면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개 매각이 할인 분양은 아니며,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를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240억 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반 년 이상 완공이 지연됐습니다.

공사비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은 대구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 백여 채.

수도권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즉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분양이 되어야지만 이 비용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이보경

2024년 03월 22일 13:35 (금)

종합

"대출 조이자 더 오르네"...서울 아파트 전셋값 4주 연속 상승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보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등)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한 사금융을 통해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0.01%)을 뒤로하고 보합(0.00%) 전환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보합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3월 봄 이사 철 영향 등이 겹치며 수도권 전셋값이 4주 연속 0.01% 올랐고 서울의 경우 0.02%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인천도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금주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 개별지역은 △구로(0.07%) △성북(0.06%) △송파(0.05%) △노원(0.05%) △강서(0.05%) △관악(0.02%) △강남(0.02%) 등에서 상승했지만 중랑구가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전셋값 상승세는 봄 이사 철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상승 경향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958가구(서울 1571가구, 경기 5387가구, 인천 0가구)로 3월의 1만 6227가구 대비 많이 축소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지만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며 "전셋값 움직임들이 상승 방향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03월 22일 10:14 (금)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부동산

아파트 입주장 끝나자 전셋값 ''쑥''...물량 줄어 상승세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입주장이 마무리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고덕풍경채어바니티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호가가 8억원까지 올랐다. 입주장 초기 같은 면적 전셋값 호가가 6억원대를 형성했는데 1억원이 넘게 올랐다.

지난해부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한 강남 지역도 '물량 폭탄'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에 성공한 모습이다.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입주 초기 전용 84㎡ 전셋값이 8억원대를 형성했는데 12월 같은 면적이 16억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입주를 시작한 2990가구 대단지 래미안원베일리도 전용 84.95㎡ 기준 전셋값이 지난해 5월 13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면적이 6억5000만원이나 오른 20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입주 7년차를 맞은 '준신축'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입주 초기 전용 84㎡ 기준 5~6억원대 시세에서 올해는 10억원을 넘기며 두배 가량 뛰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심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대신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셋째 주까지 0.79% 상승하며 인천(0.89%)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하락했다.

한편, 2분기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면서 전세시장에서 신축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6104가구다. 올해 입주예정인 전국 33만2000여 가구 중 31%인 10만4000여 가구가 1분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2~4분기 입주물량은 평균 7만6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량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적별로 희소가치가 커지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주도로 오름폭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2024년 03월 22일 10:05 (금)

종합

잠실 헬리오·주공 5단지 1억원 '쑥'...서울 매매수급지수 6주째 '상승'

서울 매매수급지수, 85.7→86.6…0.9p 상승 강남 3구 등 '동남권' 수급지수, 90선 돌파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6으로 전주(85.7)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주 강남 매매수급지수는 88.7로 전주(87.9) 대비 0.8p, 강북지역은 84.4에서 83.3으로 1.1p 각각 상승했다.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주(89.0) 대비 1.1p 오른 90.1을 기록하며 서울 5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중 유일하게 90선을 돌파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43평형은 25억 5000만 원에 손바뀜이 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24억 6000만 원) 대비 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또 지난 13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33평형은 직전 거래가(23억 6800만 원) 대비 1억1000만 원 오른 24억 7800만 원에 매매됐다.

또 같은 기간 영등포·양천·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87.7에서 87로 1.0p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82.4로 전주(81.1) 대비 1.3p 상승했다.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88.0으로 전주(87.7) 대비 0.3p,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88.4로 전주(87.2) 대비 1.2p 각각 올랐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4로 전주(87.7) 대비 0.7p 상승했다. 이 기간 수도권은 전주(88) 대비 0.8p 오른 87.2, 지방은 전주(88) 대비 0.7p 상승한 88.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93.3)보다 0.2p 오른 93.5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월세 고공행진에도 오피스텔 ''인기''...분양 시장서 ''흥행'' 이어갈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이 높은 월세에도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추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리인상과 세법상 주택수 포함 등으로 시장이 위축됐었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층고로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등 고급화된 특화 설계 역시 임차 수요를 끌어모을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 월세 시장 분위기가 온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10대책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입지와 상품성 등에 따라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월세 임대 수요 확대…임대수익률 살아나며 오피스텔 관심 ↑

최근 부진했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금리인상, 세법상 주택수 포함 등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됐지만 오피스텔 월세 임대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청약자들의 관심이 오피스텔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임대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보니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소형주택 임차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6.01%로 집계됐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2020~2021년 4%대에서 지난해 1월에 5.56%로 상승하더니 올해 1월 6%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세종시가 8.26%로 가장 높았고 서울 5.64%, 경기 6.11%, 인천 6.1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오피스텔 임대차 수요가 월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전세 대출 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입지나 높은 층고 등 고급화 특화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 수요가 꾸준한 만큼 월세를 통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 올해초 정부 오피스텔 규제 완화…"신규 분양 오피스텔 경쟁 치열할 듯"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이달초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오피스텔 '경희궁 유보라'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0.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B8 타입(전용 22㎡)은 22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 7대 1을 기록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이 몰렸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된 '당산역 한강 더로드캐슬' 역시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입지가 주목받으며 평균 1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에 청약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 대 1에 달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주택을 완화하면서 신축 오피스텔(25년까지 준공)을 포함한 소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가 소형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준공 2년 내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세금 관련 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 후 산정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 유입세는 증가할 것"이라며 "당첨된 오피스텔의 입지나 상품성이 뛰어나다면 임대를 줘 월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 분양 오피스텔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년 03월 22일 14:21 (금)

뉴스핌

금융/재테크

캠코, 국유부동산 153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총 153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3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0건이 포함돼 있으며 28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4년 03월 23일 (토)
세계일보
기획 0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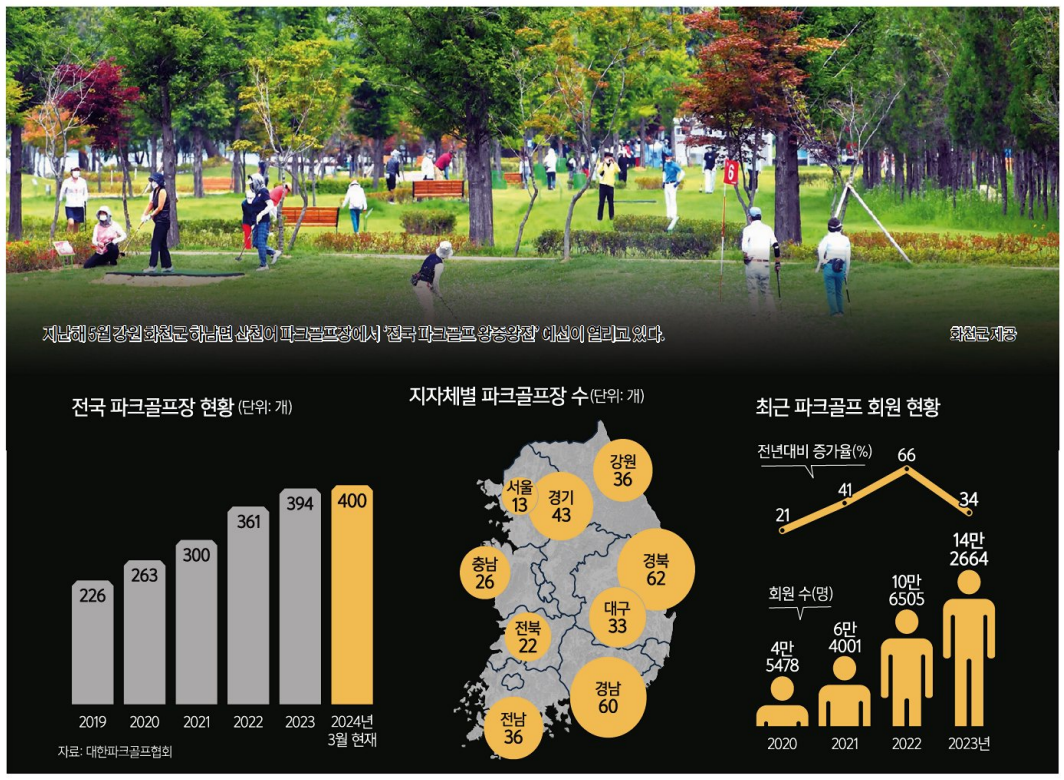
전국 파크골프장 400곳… 체육시설 넘어 관광인프라 역할

지자체 '파크골프장' 조성 붐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낙동강변 구미·동락·양포·선산·도개·해평·옥성 등 7곳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을 철거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변에 잇따라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다. 이에 구미시와 지역 파크골프협회, 동호회 등은 "지나친 규제"라며 중앙 정부에 규제 개혁을 건의해 이달부터 파크골프장 운영에 들어간다.

작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규제 완화
5년새 2배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전남, 내년까지 100곳 목표 확대 추진
화천, 3년간 누적 입장객 56만명 육박
군위군, 23만㎡ 규모 관광 특구 청사진

파크골프장 상당수가 하천변에 들어서
수질오염·생태 교란 등 환경훼손 우려
난개발 지양·장기 발전 계획 마련 시급



대구·화천=김덕용·배상철 기자, 편집
kimdy@segye.com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천법상 친수지구에서 하천 점용허가 대상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이번 파크골프장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파크골프장 전면 양성화가 완료되면서 현재 조성 중인 옥성 9홀 구장과 함께 전체 216홀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은 물론 관광 인프라 역할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서다. 하지만 동호인이 늘고 골프장 시설도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 대부분 공원 부지와 둔치 등에 조성하는 탓에 생태 환경 파괴, 홍수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국 일선 시·군 너도나도 '짓자'

파크골프는 이른바 '미니 골프'로 불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크골프 전용 채 하나로 일반 골프보다 큰 공을 친다. 한 홀 길이가 40~100m로 일반 골프(200m 이상)보다 짧다. 보통 3000~1만원 수준의 요금만 내면 1~2시간 동안 9홀 또는 18홀 경기를 할 수 있다. 1983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파크골프는 2000년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잔디를 밟으며 야외에서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어 장·노년층 사이에 크게 인기다. 22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226곳이던 파크골프장은 올해 3월 현재 400곳까지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북 62곳, 경남 60곳, 경기 43곳, 전남·강원 36곳씩 등의 순으로 많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신설이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금호강변 부지에 파크골프장 4곳(총 108홀)을 신설하고 2곳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33곳(군위군 제외)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회원 수도 2020년 1만204여명에서 지난해 2만17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파크골프장 100곳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에는 목포 삼학도·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파크골프장 등 36곳이 있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파크골프장 30개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이 3곳 있는 제주도는 최근 80억원을 들여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1곳의 규모를 2배로 넓힌다.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모든 시·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단체장까지 직접 나서 파크골프장을 약속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파크골프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민 스포츠 시설 확충, 고령층 레저 활동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관심이 매우 많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 '톡톡'

인구 2만4000여명의 강원 화천군의 경우 파크골프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대표 효자 상품으로 통한다. 매주 수백 명의 동호인이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어서다. 화천군은 한때 군부대 철수와 코로나19로 외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겨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군이 파크골프에 주목한 건 2021년부터다. 하남면에 산천어골프장을 열고 전국 대회도 유치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군내 파크골프장 누적 입장객은 5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여명이 외지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간동면과 사내면에 각각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연중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도 15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의흥면 이지리 일원 23만㎡에 전국 최대 규모(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레저스포츠 관광특구'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인근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연계해 파크골프장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여가 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파크골프 관련 학과를 개설해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2022년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경영과'를 신설해 올해 첫 졸업생 21명을 배출했다. 평균 연령 65세, 최고령 79세 만학도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제1회 전국 파크골프 대회'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파크골프 1급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는 9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최고령 졸업생 박종성(79)씨는 아예 파크골프 관련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천변에 들어서 난개발·환경훼손 우려도

파크골프장 상당수는 경사가 완만한 하천변에 들어서고 있다. 하천변은 국유지라 토지 매입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조성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장마나 홍수 시 하천 자정 능력과 홍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 과정에서 환경청이 정해 둔 절차를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과 낙동강 2개 국가하천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88곳 중 56곳(64%)이 불법으로 조성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이 주로 들어서는 하천변은 습지와 연결돼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농약 등 화학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크고 생태 교란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10월 북구 연제동 영산강 하천 부지에 27홀 크기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수질 오염, 천연기념물 등 생태 환경 파괴,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18홀 규모로 축소했다.

주민 간 갈등 문제도 잇따른다. 경남 창원시와 창원 파크골프협회는 대산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협약을 위반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운영했다는 이유로 관리·운영권을 박탈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도심에서 작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짧은 코스 덕에 고령층 접근이 쉬워 파크골프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은 지양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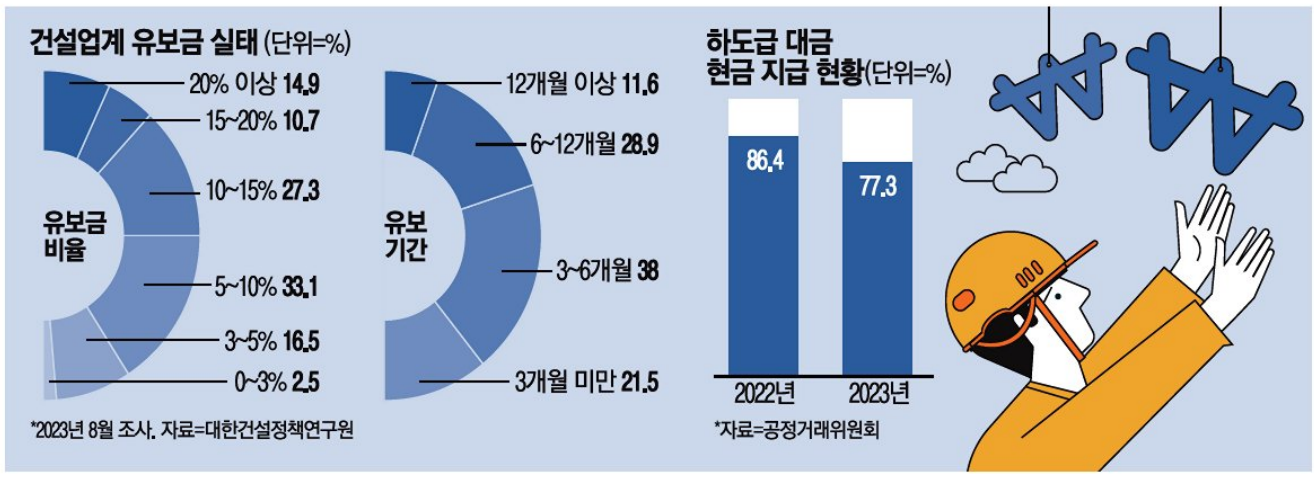
경제 13면

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공정위, 유보금 실태조사 착수

불합리한 거래 관행 차단나서

대기업 '업계 관행' 빌미로
유보금 설정해 대금 미지급
중소기업, 직원임금도 못줄판



콘크리트·철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초 공사를 끝내고도 1년이 다 되도록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자재 가격에 인건비까지 오른 가운데 공사대금마저 제때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원도급 기업이 하자 보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금 10%를 유보금으로 잡았다"며 "잘못하다가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불합리한 유보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건설 분야 유보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비롯한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분야 유보금 현황을 조사할 예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보금은 사업자가 계약 이행 의무나 하자 보수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유보된 기성금은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된 뒤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하자 보수 외에 준공 대금 정산, 추가 공사 대금 정산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유보금을 부당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유보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원사업자의 유보금 설정으로 피해가 커진다고 하소연한다. 대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설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편법이 늘고 있다"며 "특수조건에 유보금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업체 또는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설명 문서에 유보금 조항을 적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없애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시장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소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담긴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진한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서울경제
금융/재테크 06면

대우건설, iF 디자인 3년 연속 수상

푸르지오 '스마트스위치 2.0' 빌딩 테크놀로지 부문 본상

대우건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사진)'이 빌딩 테크놀로지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풀터치 스위치와 생활 정보기로 구성된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은 스위치 하나만으로 손쉽게 라이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디자인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던한 스타일로 리뉴얼됐다. 5인치 풀터치 LCD가 적용된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는 조명, 색 온도, 디밍(광원의 밝기를 조정하는 과정), 난방, 콘센트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생활 정보기는 날짜와 시간, 날씨, 미세먼지 농도, 주차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괄 소등과 가스·쿡탑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과 방범 설정도 가능하며 외출 키도 제공해 손쉽게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2022년 iF 디자인 어워드 3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며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을 분양하는 프로젝트에 전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東亞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사설/칼럼 27면

'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돌잔치나 뷔페, 결혼식 등의 행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없다.

1700억 원을 들여 2021년 개관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가동률이 30% 수준에 그쳐 누적 적자가 50억 원이 넘었다. 가까운 부산과 경주에 이미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 행사 유치가 쉽지 않았다. 울산시는 센터를 키즈카페에라도 임대해 적자를 메우려고 최근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 1200억 원 넘게 들인 창원컨벤션센터도 칠순잔치와 피로연 장소로 주로 쓰이다 보니 지역 상인들로부터 "혈세를 들여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컨벤션센터 증축이나 신축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400억 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지으려다 공사비 인상으로 보류했다. 2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다음 달 착공 예정이며, 전북 전주시도 3000억 원을 들여 신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짓더니 이제 와서 제 살 깎기 경쟁을 하지 말자며 더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상당수의 지역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제론 지자체장의 과시와 치적 쌓기 용도인 경우가 많다. 장밋빛 전망으로 수요 예측을 부풀려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다. 한 지자체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 베끼면서 비슷한 사업이 널렸다. 전국 40여 곳에 케이블카가 있지만 90% 이상이 적자 상태다. 곳곳에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이 넘쳐나고, 최초·최대·이색을 내건 랜드마크와 구조물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경우도 많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금 낭비를 더는 내버려둬선 안 된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지자체 간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혈세가 새는 곳을 틀어막아야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다.

한국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오피니언 22면

취재수첩

중구난방 행정구역 개편논의, 기준 마련해야

오유림 기자
사회부

'5호선 해결사, 서울 편입도 부탁해요' '공부 잘하는 우리 손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닙니다'.

최근 경기 김포시청 인근에 나붙은 현수막 문구다. 서울 편입 아이디어를 들고나온 김병수 김포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게 표현돼 있다. 김 시장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론'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전반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메가시티론을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체계 없이 행정구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해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김포 주민 중 '김포는 서울 생활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울 인근 거주자들이다. 김포 서북단 끝에 사는 이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통계를 살펴보면 더 혼란스럽다. 김포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2020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약 16만3000명)다. 출퇴근 인구수만 따져 보면 김포시는 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1번째 수준이다. 물론 심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평소에 겪는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클수록 행정구역 조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이 통계 데이터 뒷받침도 없이 목소리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면 문제다.

각 지자체나 주민들의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모두 데이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 또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주장에 가닥을 잡아줘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정치인들의 눈치만 살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장만 난무하는 메가시티론
정부가 중심 잡고 기준 제시해야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입을 뗀 것은 최근이다. 선거철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1호 과제로 정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꾸리겠다고 했다.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 시 경제성 효과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효과 분석 모델이 있느냐, 구역 개편에 동의하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30년 만에 진행되는 행정자치제도의 전환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선 곤란하다. 정부는 선명한 기준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2024년 03월 22일 21:29 (금)

KBS

사회

강풍에 타워크레인 휘어...케이블카도 '중단'

[앵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22일) 돌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는데 목포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는가 하면 케이블카 운행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목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28층까지 올라간 아파트 끝, 타워크레인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가로로 놓인 크레인 구조물이 강한 바람에 270도가량 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고 시각은 낮 12시쯤.

순간 풍속은 최대 초속 17.5미터였습니다.

당시 목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은옥/인근 음식점 직원 : "일하고 있는데 소리가 엄청 커 가지고 천둥번개 치는 줄 알았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천둥번개가 치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크레인이 휠 때 운전석에는 크레인 기사가 타고 있었지만, 휴게 시간이어서 크레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또 크레인 아래를 지나는 사람도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일부가 인근 음식점 옥상과 주차장에 떨어져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김규헌/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순찰팀장 : "교통을 통제하고, 업체 측에서 크레인 철거 팀을 불러서 현장 진단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강풍 때문에 해상케이블카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오전 11시 반부터 운행을 중단했고, 여수에서도 60명이 탄 해상케이블카가 오전 한때 30분간 멈춰섰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기계 부품이 파손돼 사고가 났다며 승객들에겐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2024년 03월 22일 20:23 (금)
MBC
사회

"크레인 일부가 300미터나 날아가 " 대형 크레인 꺾여 추락

[뉴스데스크]
앵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꺾이면서 구조물 일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과 주차장이 부서졌고 일부 구조물이 3백 미터 떨어진 아파트 주변까지 날아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앞부분이 아래로 꺾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적재물 연결 부위의 구조물은 완전히 끊어져 온데간데없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목포시 상동의 28층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일부 구조물과 연결부위가 떨어졌습니다.

[문홍진/목격자]
"저게 뭐지? 날아오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철근 골재였고, 타워크레인을 보니까 아예 꺾여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피하고 있었던 것 같고…"

끊어진 크레인 구조물은 10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주변 숙박업소의 주차장을 덮쳐 지붕과 차량 등이 부서졌습니다.

일부 철 구조물은 3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날아갔습니다.

사고 당시 목포에는 시속 62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주의보가 발효돼있었습니다.

[현장 근로자 (음성변조)]
"뭐 어떤 예고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서…"

하지만 앞으로 뻗어 있던 크레인 앞부분이 뒤로 넘어가 270도가량 꺾여 있는 상황이어서, 강풍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와 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업체를 동원해 해체 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바람 불면 당장 위험하니까 와이어로프 같은 것으로 결박만 해놓으면 추가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해체하려면 장비가 30톤 크레인으로 할지…"

경찰은 타워크레인 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영상취재: 고재필 (목포)

2024년 03월 22일 20:30 (금)

사회

크레인 휘고 케이블카 멈추고...전남 곳곳 강풍 피해

<앵커>

오늘(22일)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완전히 휘어지는가 하면 여수에서는 케이블카가 30분 동안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12.2m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연정/목격자 :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문이 막 왔다갔다할 정도였어요. 안에서도 문짝이 막 왔다갔다했어요.]

비슷한 시각 전남 여수에서는 해상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끌어당기는 기계의 볼트가 부서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수에서는 초속 9.4m의 바람이 불어서 승객 60여 명이 공중에서 30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전남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신안군 가거도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4.9m를 기록하는 등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파도도 1.5~3미터로 높게 일면서 여수와 광주 공항에서 항공기 14편이 지연됐고, 여객선 43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강풍이 불고 있다며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점차 잦아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전남 여수소방서)

2024년 03월 22일 20:28 (금)
MBC
경제

태영, 최대 사업장도 '삐그덕' 저축은행 PF 연체 7%

[뉴스데스크]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위기의 시작이 됐던 태영건설이, 추가 건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PF 부실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한 대형 복합시설 공사현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태영건설 최대 사업장으로 공정률 78%를 넘어섰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영측은 대주단 은행을 상대로 연이자 7%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6%의 금리로 추가 자금을 내주는 상황인데 가장 안정적인 사업장에 7% 넘는 이자를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소 8% 이자를 요구하는 사업장 대주단은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주단에서 빠지겠다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6%와 9.5%에서 간극을 좁힌 상태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전국 59개 사업장 가운데 또 다른 현장도 '태영'에 대한 추가 건설비 지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두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원인인데, 이를 증명하듯 PF 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은 2.7%로 올랐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부동산 PF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7%에 육박해 순손실만 5천559억 원,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잇따르며 다시 '4월 위기설'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과도한 PF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면서 PF 사업성 평가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민경태

2024년 03월 22일 20:52 (금)

SBS

경제

9년 만에 적자 · 치솟는 연체율...저축은행 '경고등'

<앵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실적이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 등으로 연체율이 크게 치솟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괜찮은 건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현장.

지난해 사업 인가 후 아직은 브릿지론 단계, 올해 본 PF대출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이른바 '노른자 땅'인데도 이 사업장에 대출해준 한 저축은행은 최근 위험요인을 반영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놓자 이렇게 된 것이죠.]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단계의 PF대출을 많이 해, 부동산 경기 침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1년 넘도록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위험 흡수를 위해 충당금을 쌓다 보니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1년 만에 1조 3천억 원이나 늘었고,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 경쟁으로 예금 이자 비용도 2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하면서, 저축은행 업계 순손실은 5천559억 원, 9년 만의 적자 전환입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7%에 육박하며 1년 새 2배 가까이 뛰자, 저축은행 16곳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재연 우려가 나옵니다.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위험을 나눠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격이 작다고 하면 이 위험이 분산이 돼서 감내할 수 있게 되지만 (부실) 충격이 너무 크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제 주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은 당시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다며 부실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따른 PF 사업 정상화 속도가 건전성 회복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조성웅·김한길)

2024년 03월 22일 14:34 (금)
YTN
사회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또 제동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철근 60%가량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GS건설에 별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YTN

2024년 03월 22일 16:18 (금)

경제

[자막뉴스] 풀만 무성했던 내 땅...그린벨트에 드디어 '희소식'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합니다.

50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는 몇 차례 개편을 거치고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792㎢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3.8%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한 훈령과 지침 등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와 자문, 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쯤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1차관 :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5년에는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GB(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도록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또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 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과밀 등을 이유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024년 03월 22일 14:57 (금)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사회

법원, ''부실시공''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제동(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기둥은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 이상 빠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부실시공 관련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정부 제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법원이 GS건설 측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사측으로서는 입찰 참가 등 당분간 영업 활동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동부건설 역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해당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두 개 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말일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2024년 03월 22일 13:54 (금)

종합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7일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내고 같은 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년 03월 22일 16:11 (금)

뉴스핌

부동산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판결에서 모두 인용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주장했다.

leedh@newspim.com

2024년 03월 22일 15:26 (금)

연합뉴스

종합

60명 탄 여수해상케이블카, 30분간 공중서 멈춰 (종합)

부품 파손으로 자동 중단…여수시 "안전 점검 후 운행 결정"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춰 승객 60명이 30여분간 공중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여수시 돌산읍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정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회사 측은 비상 모드로 전환해 케이블카를 작동시켜 승객들이 타고 있는 캐빈을 스테이션으로 옮겼다.

멈춤 당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 캐빈은 모두 40여개로,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30여분 만에 모두 무사히 스테이션에 하차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는 케이블카를 끌어당기는 기계의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부품이 파손되자 자동으로 케이블카가 멈춰 섰다.

회사 측은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했으며, 파손된 부품을 교체해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케이블카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전 점검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회사는 시범 운행에서 별문제가 없으면 운행하겠다고 하지만, 기계 전반을 점검해봐야 할 수도 있다"며 "국토부, 회사 등과 함께 살펴본 후 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멈춰 선 것은 5년 만이다.

2019년 3월과 7월 낙뢰 등으로 두차례 운행이 멈춰 승객들을 불안케 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돌산~자산공원 1.5 구간을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5대(6인승)와 일반 캐빈 35대(8인승)가 운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여수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연간 100만명이 찾고 있다.

cbebop@yna.co.kr

2024년 03월 22일 15:35 (금)

뉴스핌

부동산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수행 중 애로사항, 문의하세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견건설사 ㈜OO은 2020년 3월 UAE(아랍에미리트)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청사는 자사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 10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열어 기성금 청구권 검토 및 중재 해결방안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2회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국제중재를 신청토록 했고 지난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 및 손해배상액인 970만불(한화 약 129억8300만원)과 중재·소송비용 180만불(한화 약 2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2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라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법률-세무 통합 컨설팅도 가능하다.

▲전문가 컨설팅 분야에서는 견적, 입찰, 계약,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사 수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법률컨설팅에선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의 사안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세무컨설팅에선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금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건설멘토링센터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2024년 03월 22일 14:55 (금)

사회

국토안전관리원, 선제적 안전관리 'CSI 사용자 매뉴얼' 배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2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 사용자 매뉴얼'을 새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발주청과 설계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검토 결과)를 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CSI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업무 담당자들이 기능이 개선된 CSI를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처리 절차, 검토결과 제출, 컨설팅 요청 등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됐다.

한편 새 '매뉴얼'은 CSI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03월 22일 17:20 (금)

종합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CSI 사용자 매뉴얼' 배포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2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 사용자 매뉴얼'을 새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발주청과 설계사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검토 결과)를 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CSI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업무 담당자들이 기능이 개선된 CSI를 통한 설계안전성검토 처리 절차, 검토결과 제출, 컨설팅 요청 등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새 '매뉴얼'은 CSI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기업 14면

전기차 보조금 '아이오닉6' 700만원 '폴스타2' 163만원

전기차 61종 국고보조금 분석

아이오닉5·6, EV6 최상위권

LFP배터리 모델Y 100만원대

수입차는 폭스바겐 ID.4 으뜸

벤츠·BMW 극소수만 혜택

국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이륜 모델을 구매하면 보조금으로 약 700만원을 받는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 산정에 처음 포함하면서 재활용도가 떨어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하위권에 머물렀다.

22일 매일경제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된 국내 승용 전기차 61종의 국고 보조금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대차 아이오닉5·6, 기아 EV6 등 현대차그룹 주력 전기차 모델이 600만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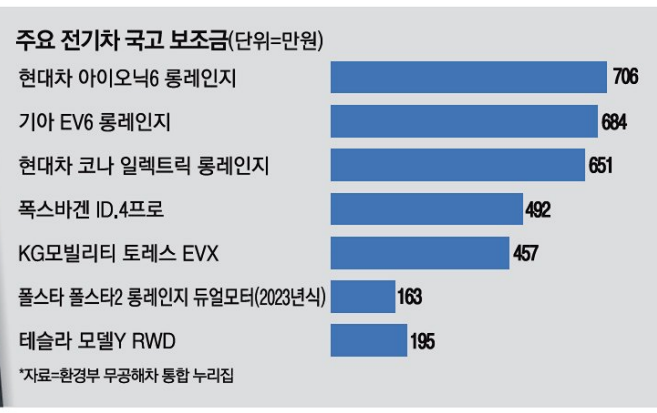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는다. 국고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보다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전기차는 휠 크기가 커지면 바퀴를 한 번 돌리는 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 효율이 떨어진다. 휠 크기, 전·후륜 등 일부 옵션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일부 달라지는 이유다.

국고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급속 충전기 설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전기차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사후관리 설비 등을 점수화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국고 보조금 706만원이 책정된 아이오닉6는 국고 보조금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된 당시 아이오닉6는 국고 보조금 69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3월 연식 변경 모델인 2024년형 아이오닉6가 출시되면서 국고 보조금은 10만원 넘게 상승했다.

아이오닉6는 롱레인지 이륜 모델(2WD) 18인치·20인치, 롱레인지 사륜 모델(AWD) 18인치가 각각 706만원을 받게 됐다. 아이오닉6 스탠더드 이륜 모델(2WD) 18인치는 국고 보조금이 700만원이다.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5, 코나 일렉트릭은 모두 국고 보조금을 600만원 이상 받는다. 기아 디 올뉴 니로 EV,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국고 보조금이 5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됐다.



국산 브랜드 중 KG모빌리티 토레스 EVX는 올해 400만원대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가 올해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보조금 산정 기준에 처음 도입하면서 토레스 EVX 국고 보조금은 작년보다 약 200만원 감소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는 국고 보조금이 하락한 만큼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구매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차 중에서는 폭스바겐 ID.4프로가 가장 높은 국고 보조금(492만원)을 받게 됐다. 이어 2024년식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이 439만원의 보조금이 산정되며 수입차 중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작년 모델인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모터는 국고 보조금이 163만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가장 낮았다.

전기차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이들 수입 고가 브랜드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차량 가격 55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 때문에 소수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국고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받았던 중국산 테슬라 모델Y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영향 등으로 195만원을 받게 됐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이 5500만~8500만원이면 절반의 보조금을 주며, 8500만원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소라 기자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사회 17면

“지하철 진입 순간 긴장… 여성 노린 ‘나쁜 손’ 다 잡아냅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 순찰 현장 함께해보니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서울 건대입구역. 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이 되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권오근 경장(38)의 눈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인파 속에서 수상쩍은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소매치기범이나 몰카범 특유의 몸동작을 식별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건대입구역은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가운데 유실물을 가져가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다. 권 경장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선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범인을 검거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해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주요 역 중심
경찰·교통공사 2인1조 순찰
성범죄 검거율 80% 넘어서
늦은 밤 취객 행패까지 해결

“최근 범죄 느는데 인력 줄어
팀 확충돼 활동 더 늘렸으면”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다. 현재 인원은 118명. 이들이 인구 900만명이 넘는 서울의 지하철 역사 407곳과 전동차 내 숨어 있는 ‘검은손’을 쫓는다. 혼잡한 인파 틈 속에서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수분 내 현장에 도착할 태세를 갖춘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합동으로 열차 내부 순찰을 돌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왼쪽)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원이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증가일로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2년 3378건에서 지난해 3546건으로 200건 가까이 늘었다.

다행이라면 검거율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범죄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지하철 내 성범죄는 지난해 1230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023명을 잡아들이면서 83.2% 검거율을 기록했다. 전체 범죄 검거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새벽 시간에 열차 내 취객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훔친 절도범을 검거했고, 러시아 국적의 원정 3인조 지하철 소매치기단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1급 지적장애인인 30대 남성 A씨가 혼자 지하철을 헤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하철경찰대에게 발견돼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됐다. 김기창 서울지하철경찰대 안전계장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선릉역에서 2호선 열차를 타 신도림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해 신속히 출동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은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을 쫓을 때 지상에 있는 지구대·파출소는 관할 범위를 벗어나 수색에 한계가 있다”며 “지하철경찰대는 사건 발생 역사에서 가장 인접한 센터팀이나 수사팀을 즉시 파견해 범인과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백 모씨(24)는 “밤늦게 귀가할 때 지하철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 때문에 무서웠던 적이 있다”며 “당시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 취객을 데려갔는데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기획 B03면

청주공항이 '빅 5'로 급부상한 까닭은?

경기도 수요까지 흡수하며
운항편수 대구공항 앞질러

올해 이용객 78만명
평일 낮에도 청사 북적
"탑승 수속 빠르고
주차비 저렴해 애용"

지난 19일 오후 2시 청주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평일 낮에도 공항 주차장은 만차였다. 10분을 빙빙 돌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 주차했다. 사람이 많은 건 공항 청사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1층 도착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단체 관광객들로 붐볐다. 일본 오사카로 여행 갔다가 티웨이 항공을 타고 청주공항으로 돌아왔다는 70대 부부는 "패키지여행으로 다녀왔다. 대전에 살아 청주공항을 이용한다"고 했다.

출발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2층은 더욱 북적였다. 공항 내 푸드코트인 '플레이버 6'는 사람이 꽉 차, 줄을 서야 했다. 이날 여섯 살 아들과 대한항공을 타고 제주도에 간다는 30대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살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가나 청주공항을 가나 거리가 비슷하다"며 "탑승 수속도 빠르고 주차비도 저렴한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혜운 기자

지난 19일 오후 청주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청사에서 여행객들이 국내선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올해 1~2월 청주공항 운항 편수는 4724편으로 대구공항(3507편)을 앞질렀다.

청주공항이 대구공항을 제치고 '빅 5'에 올랐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청주공항 운항 편수는 4724편으로 대구(3507편)를 앞질렀다. 이용 여객 수도 78만768명으로 대구(57만9148명)보다 많다. 청주 인구는 85만1715명(2024년 2월). 두 달 동안 전체 인구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에 온 것이다. 이곳보다 이용객이 많은 공항은 인천·제주·김포·김해다.

청주공항 부상(浮上)의 이유로는 먼저 지리적 이점이 있다. 원래는 대전·청주·세종권 사람들을 겨냥한 공항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인구 밀집 도시가 많아지면서 경기도 수요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한 국제선도 갈수록 증가했다. 현재 청주공항은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다낭 등 6국 국제노선 9개를 운항 중이다. 이달 중엔 마카오와 홍콩 노선이 개설된다.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취항도 준비 중이다.

그 결과 청주공항의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13만8100명으로 역대 월간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월간 최다 기록은 지난 1월 12만3118명.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는 국내선 317만3779명, 국제선 52만2217명 등 369만5996명을 기록했다.

다른 공항보다 입출국 수속이 빠르고, 항공 요금뿐만 아니라 주차비 등 공항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김포공항 주차는 30분에 1000원, 1일 2만원이지만, 청주공항 주차비는 1시간 1000원, 1일 1만원이다. 주차하고 며칠 동안 다녀와도 비용이 적게 든다. 국내에 몇 안 되는 24시간 운영 공항이라는 장점도 있다. '시니어 서포터스'도 시작해 키오스크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주차 요금 결제를 할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충북도 측은 "연간 이용객 700만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통합 건물은 국내선 여객터미널 전용으로 사용하고,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약 300만명 규모로 신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이혜운 기자

서울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산업/무역 10면

1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장 교체투입…통합 시너지 높인다

조원태 'A350 구매' 배경은

2 최대 1.6만㎞ 운항 가능
장거리 노선 공략·탄소절감

3 410석 규모 대형기 도입
항공 화물사업 확대 효과도

에어버스 A350-1000

대한항공이 계약 액수로는 창사 이후 최대인 18조 원을 투자해 에어버스의 A350 33대를 첫 구매한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합병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기종(A350)을 대규모 도입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 번에 최대 1만 6000㎞를 비행할 수 있고 동급 항공기보다 탄소 배출이 25% 적은 A350으로 장거리 운항 사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A350 기종 가운데 A350-900은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국내 항공사로는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도 주력 기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이 자유롭게 교체 투입돼 각사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 기종을 운항하면 기장들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기종 전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A350 기종의 경우 모델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추가 교육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종 단일화는 부품 수급이나 정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비용 감축을 통해 급속 성장을 이룬 요인으로 기종 단일화가 꼽히기도 한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대한항공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350 도입은 장거리 운항 사업을 확대하려는 조 회장의 전략이기도 하다. A350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인 A350-1000은 주유 한 번에 인천을 출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까지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 지난해 4분기 대한항공의 전체 매출에서 장거리에 속하는 미주와 유럽 노선 비중은 60% 이상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48%)보다 크게 늘었다. 또 A350-1000은 운항 한 번에 승객 최대 410명을 태울 수 있는 '광동체(와이드 바디)'로 분류되는데 자연스럽게 실을 수 있는 화물량도 늘어나 항공 화물을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항공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탄소 감축도 A350 도입으로 대한항공이 얻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50년 항공 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글로벌 항공 업계와 합의한 만큼 대한항공에도 탄소 감축은 주요 과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350은 고강도지만 가벼운 소재를 활용해 중량을 크게 낮춰 탄소 배출이 최대 25%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고효율 항공기를 해외 장거리 노선에 투입해 '저탄소 항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파리~인천 노선에서 기존 항공유에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SAF)를 1.5%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조양준·김경택 기자

2024년 03월 22일 20:41 (금)
사회

[단독] 역주행 방지장치 없다더니...설치됐는데도 '우르르'

<앵커>

지난해 말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당국은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그 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고가 왜 일어난 건지, 이 내용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10명이 다쳤습니다.

부속품인 감속기 기어가 마모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주행 방지 장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12월 14일 통화) : 뒤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역주행 방지 장치를 저희들이 지금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미끄러질 때 이를 감지해 정지시키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공사 측 해명과 달리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5년간 대당 300만 원 정도의 역주행 방지 장치 1천여 대를 설치했는데, 경복궁역도 포함됐습니다.

공단 측은 설치돼 있었던 건 맞지만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인증을 공단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준 제품들은 모두 다 미설치이고….]

설치 사업 당시 인증 제도가 운영 중이었는데, 권고 사항이다 보니 인증받지 않는 제품들이 설치된 겁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 업계 관계자 : 역구동 장치라고 하지만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걸 본 것 같고, 지금 기준을 놓고 보면 형편없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부터 대당 약 1천200만 원을 들여 인증을 받은 장치를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받은 장치가 설치됐던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지난해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주행 방지 장치에 대한 점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거운 추를 에스컬레이터에 실어 점검하는 '부하 검사'도 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 이후 '부하 검사'가 시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억/서일대학교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교수 : 장치가 설치되는 현장이 다 다르거든요.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하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은 노후된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우려 때문에 부하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점검 대상을 선별해 부하 검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동민, VJ : 이준영·김종갑)

2024년 03월 22일 17:18 (금)
YTN
경제

GTX-A 수서·동탄 요금 4,450원...'철도 지하화' 시동

[앵커]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 K패스를 이용하면 3,5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지상에 있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의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공개됐는데 요금 정책이 좀 복잡하다고요?

[기자]
일단 일반 성인 기준 요금으로는 4,450원이 책정됐습니다.

GTX의 기본 요금은 3,200원이고,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은 32.8㎞이라 요금은 4,450원이 되는 겁니다.

수서~성남 10.6㎞ 구간은 3,450원, 성남~동탄 22.1㎞ 구간은 3,95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20% 환급을 받아 3,56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은 30% 환급을 받아 3,110원, 53.3% 환급을 받는 저소득층은 2,070원에 GTX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50%, 청소년 10%, 65세 이상 30%, 장애인·유공자는 50%씩 별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4년 03월 22일 17:18 (금)

YTN

경제

[앵커]
GTX 개통으로 버스로 75분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 통근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된다고요?

[기자]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반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쯤 도착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반~9시 출근 시간대에는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방향 기준으로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립니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것에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서울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중간 구간인 서울역~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진용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GTX 사업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진용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GTX 사업단장: (버스) 90분과 (승용차) 70분에 대비해 GTX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GTX는 전철·버스·택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편한 게 특징이라고요?

[기자]
GTX-A 노선의 각 역에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습니다.

수서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 열차와 3호선, 수인분당선 등 다른 3개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성남역에서는 GTX-A와 같은 날 개통하는 판교~여주 간 경강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으로는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철도 지하화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면서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는 곳이 바로 지하화가 한창 진행 중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철도역입니다.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녹지, 주거, 업무, 상업, 교통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처럼 도심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 공간은 개발해 낙후된 도심 재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와 현황을 검토해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능성이 큰 곳은 경인선입니다.

구로부터 인천까지 이어지는 21개 역 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경인선 철도 지하화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은 먼저 요구한 데가 또 인천이었고요. 일찍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는 재원 마련일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곳에서 진행될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기자]
철도 지하화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고 지상 공간을 활용해 사업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 조달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이 140조 원이라는 철도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하면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공단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회수하는 구조로 가져갈 때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계획된 공기 내에 지하화 철도 건설을 마치고, 상부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GTX-A 요금과 철도 지하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YTN

2024년 03월 22일 13:40 (금)

경제

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져...주 1,450석→주 21회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을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그동안 '주 천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습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업인이나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2024년 03월 22일 15:16 (금)

뉴스핌

부동산

교통안전공단, 국내최초 대형변압기 수송 특수화물열차 ''슈나벨카'' 승인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로부터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최대 크기 및 적재중량 특수화물차인 '슈나벨카'에 대해 첫 형식승인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대형변압기 수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특수화물열차 슈나벨카(Schnabel Car)에 대한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가 착수됐다.

TS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차량길이 약 32m, 차축 16개, 적재중량 170톤 규모의 국내 최대 크기 및 최대 적재중량의 특수화물열차 슈나벨카를 대상으로 2025년 5월까지 진행된다.

특수화물열차 슈나벨카는 대형변압기(765kV 급 변압기) 수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특수화물열차로 국내에서 처음 제작되는 철도차량이다.

슈나벨카는 2000년 우크라이나에서 제작 및 수입돼 사용돼 왔다. 지금은 차량이 노후화돼 향후 준공되는 변전소에 대형변압기를 수송할 신규 슈나벨카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TS는 지난 3월 4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어 신규 제작 슈나벨카의 검사일정 및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정확한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TS는 앞으로 다양한 차종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T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6월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후 검사체계 마련과 조직, 검사 프로세스 구성 등 적합성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8월 철도용품 형식승인(기관차용 차륜) 최초 검사 완료를 시작으로 올해 철도차량 형식승인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철도차량의 제품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철도차량 설계,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철도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와 함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4년 03월 22일 16:46 (금)

연합뉴스

종합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공항 성격 등 두고 법정 공방

"사익 위해 국토부 직원 자녀 채용" vs "청주공항은 군 공항"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토교통부 직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안을 '채용 비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부 직원 A씨의 변호인은 2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무한 청주공항은 군 공항이어서 사용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스타항공 전 인사팀장 B씨에게 "사건이 있던 2016년 당시 청주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고 물었다.

B씨가 "국토부에 있었겠죠"라고 얼버무리자, 변호인은 "제가 공군에 근무했는데 군 공항은 슬롯 허가를 국토부에서 관할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변호인은 다시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국토부 직원인 A씨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막강한 직책'이라고 진술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조사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검찰이 그 권한을 보여줘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아마 검찰이 '업무분장표' 등을 보여주니까 증인이 '이 정도면 막강한 위치겠구나'라고 짐작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B씨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B씨가 군 공항의 특수한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A씨가 자신의 딸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특혜를 준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검찰은 B씨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받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채용 과정에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은 채용 당시 최 전 대표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부 직원의 딸이 지원했는데 민감한 사안이니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네 (인사부서)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최 전 대표에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증인은 이후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나는 떠나면 그만'이라는 문자도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B씨는 "기업 운영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예를 들어 (부정 채용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의 심문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건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각자의 논리로 상대의 주장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 이익을 위해 A씨의 딸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이들의 공방을 지켜봤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께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또 다른 채용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며 당시 이스타항공에 근무했던 직원과 공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린다.

jaya@yna.co.kr

2024년 03월 22일 17:43 (금)

종합

이스타항공 전 인사팀장 "당시 국토부 직원 자녀 합격 후 대표에 문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사건 당시 인사팀장 법원 증인 심문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속행공판이 2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개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인사팀 실무자였던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국토부 직원 A 씨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가 청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이스타항공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직원으로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당시 국토부 소속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공항출장소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B 씨에게 서류심사와 2차 면접에서 잇따라 탈락한 A 씨 자녀가 최종 합격 처리된 경위에 대해 아는지, 최 전 대표에게 그에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B 씨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직원들을 통해 A 씨 자녀가 추가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최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B 씨가 이날 최 전 대표에게 받은 인사 청탁 성격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채용 과정에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이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청주공항은 일반 공항이 아닌 군 공항이기 때문에 비행시간 조정을 위해 공군에게 신고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비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며 "하지만 증인은 A 씨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해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다. 추측해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B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다음 재판은 5월14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경제 13면

철도지하화 시동… 연내 대상노선 선정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전국 주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를 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연내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경부선, 경인선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026년 3월까지 2년간 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철도 용지 현황과 국내외 철도지하화 사례를 조사하고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어떤 지하화 공법을 선택할 것인지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 개발 방향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하화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 노선에 더해 지자체가 건의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6대 특·광역시 노선 위주로 지하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선 서울역~구로역 구간을 지하화한 뒤 일대를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개발하고, 구로역~석수역 일대를 신산업 경제축, 청량리역~도봉역을 동북생활경제축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수가 가능한 선도사업 후보로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과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

2024년 03월 22일 18:28 (금)
YTN
경제

"경인선부터 철도 지하화"...채권 발행해 재원 마련

[앵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인선과 경부선, 경원선 등이 유력한 가운데 재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슈투트가르트 철도역과 인근의 철로는 지하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녹지, 주거, 업무, 상업, 교통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완성되면 유럽의 교통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처럼 도심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 공간은 개발해 낙후된 도심 재생을 지원한다는 방침.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와 현황을 검토해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공법과 자금 조달 방안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입니다.

특히 가능성이 큰 곳은 경인선입니다.

구로부터 인천까지 이어지는 21개 역 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사실은 먼저 요구한 데가 또 인천이었고요. 일찍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50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국가철도공단은 140조 규모의 철도 자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024년 03월 22일 16:10 (금)

종합

박상우 국토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교통안전교육 일일강사 참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신우초등학교를 방문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저출산대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박 장관은 교통안전 전문강사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한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 교통안전 표지판의 의미, 안전한 보행방법 등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교보재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 그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열심히 일 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국토부는 교육부와 논의해 늘봄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03월 22일 16:13 (금)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부동산

박상우 국토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일일강사로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이번 일일강사 참여는 국무위원이 부처 소관업무를 직접 교육해 늘봄학교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교통안전 전문강사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과 교통안전 표지판의 의미, 안전한 보행방법 등을 쉽게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기도 이용했다.

박 장관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교보재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시범도 보였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2024년 03월 22일 16:17 (금)

경제

강희업 대광위원장, GTX 운정역.환승센터 건설현장 점검

올 하반기 운정~서울역 우선 개통
적기개통, 안전관리 철저 등 당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30분 파주의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올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운정역과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며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정치 03면

수원·화성·용인 '반도체 벨트'도 국민의힘 고전

"정부 견제" 늘어 A1면에서 계속

수원을 비롯해 화성, 용인 등 경기도 지역은 '반도체 벨트'로 묶어 정부여당이 집중 지원해온 곳이지만, 여당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분당에서 혼전 양상이면 다른 수도권 접전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우세라고 보면 된다"며 "수도권 선거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 결과까지 감안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들의 의석은 2020년 총선보다 늘어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선 민주당 비례정당과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8%로, 둘을 합해 31%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에 투표한다는 응답자는 22%였다.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30%로 늘었고,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23%로 똑같았지만,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몫을 합하면 45%나 된다.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와 자유통일당 각각 2%, 녹색정의당 1% 등으로 이른바 '제3지대' 몫은 줄었다. 각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동안 다른 이슈에 가려 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에 모두 비판적이었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결과"라며 "이런 유권자들이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란 선택을 하게 되면 2020년처럼 민주당 압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The JoongAng

2024년 03월 23일 (토)

선거 04면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출마자 699명 평균 나이 56.8세 … 10명 중 8명이 5060

〈22일 오후 10시 기준〉

80대 후보 3명…남성 17% 군 미필

전과자 35%, 5년 내 체납 이력 83명

김복덕 1446억원 신고 재산 1위

재산 상위 10위 중 7명이 국민의힘

▶1면 '총선'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에선 김태형 서울 강남갑 후보가 403억2700만원을 신고해 최대 자산가였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진선미 민주당 서울 강동갑 후보로, 마이너스 8억95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이성심 서울 관악을 후보였다(마이너스5억8400만원).

전체 후보자 중 납세액 1위는 102억3000만원의 세금을 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였다.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후보가 2위로 61억6100만원이었다. 민주당에선 박정 경기 파주을 후보가 최고납세자였다(51억8200만원). 반면 지난 5년간 체납한 후보는 83명으로 민주당에서 21명, 국민의힘에서 32명이었다. 후보 등록 시점에도 체납한 후보는 9명으로,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민주당 후보가 최대였다(5652만원). 5년간 세금 한 푼도 안 낸 후보도 1명 있는데 울산 남갑의 오호정 우리공화당 후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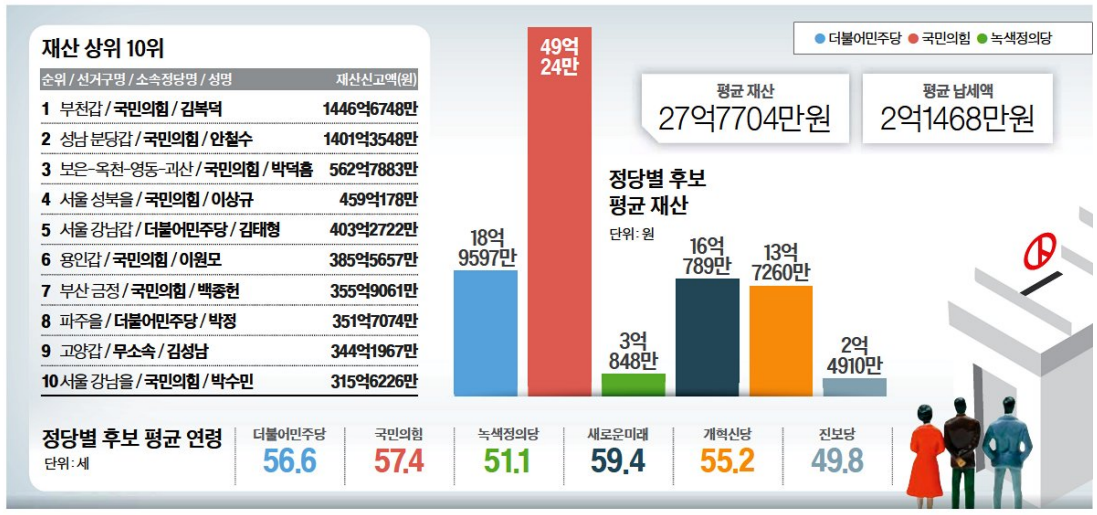
탈북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를 제외한 남성 후보 599명 중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500명(83.5%)이었다. 전체 후보 가운데 242명(34.6%)는 전과자였다. 가장 전과가 많은 사람은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호 무소속 후보로 11건이었다.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건축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당별 평균 전과수는 국민의힘(0.3)·민주당·개혁신당(이상 0.7)이 낮았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란 비판대로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미래로 5명(설훈·홍영표·김종민·박영순·오영환), 개혁신당으로 2명(이원욱·조응천)이 이탈했고, 3명(3혜숙·이상헌·이수진)이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을 포함해 당 지도부거나 주요 당직자 23명은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이거나 친윤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대선후보 경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친윤 현역 의원은 대부분 생환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거나 지지선언을 한 현역 45명 중 38명(84.4%)이 공천을 확정했다.

막말과 구설에 따른 후보 사퇴와 재공천도 잦았다. 국민의힘에선 김현아(경기 고양정)·박일호(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예비후보 등이 비위 혐의나 논란으로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

도태우(대구 중-남)·장예찬(부산 수영) 후보는 과거 막말 논란이 뒤늦게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서울 강북을에서만 정봉주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를 연달아 공천 취소한 뒤 22일 한민수 대변인을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구 조정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91명 가운데 61명(73.6%)이 지역구에 재공천됐고, 민주당에선 지역구 현역 139명 가운데 92명(66.2%)이 공천을 받았다.



東亞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선거 03면

여야 '위성정당 꼼수' 25억 챙기고… 무자격논란 인사, 당선권에

4년전보다 더 난립한 비례정당

폭력전과자 면접도 없이 포함

재판 중인 인사들도 당선권에

"의원직 상실형 땐 줄줄이 승계"

전문가 "비례 제도 뜯어고쳐야"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예상 수령 금액

정당	의석수	예상 수령 금액(원)
국민의힘	101	약 125억
더불어민주당	142	약 125억
더불어민주연합	14	약 25억
국민의미래	13	약 25억
녹색정의당	6	약 25억
새로운미래	5	약 25억
진보당	1	약 10억
기후민생당	0	약 10억

확보 의원수가 5명 미만인 신설 정당 개혁신당(4명), 조국혁신당(1명) 등은 위 정당들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의석수에 따라 비율을 정해 지급.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무자격 논란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다시 원내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비례투표 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따로 챙겼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폭행 전과자도 당선권 포함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는 과거 반미 운동에 가담했거나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11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과거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국 대표(2번)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심을 앞두고 있고, 황운하 의원(8번)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2심 재판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뒤 번호 후보들이 줄줄이 승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변희재 씨를 2번,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3번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도 등장해 비례대표 후보 검증 기능이 약화했을뿐더러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호남권 인사를 뒤 번호로 배제했다가 '호남홀대론'이 나오자 뒤늦게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로 반미 성향 단체 활동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추천되자 뒤늦게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당 안팎에선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를 앞 순번에 배치하느라 정작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구경북 인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해도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하나하나 관여할 순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에도 선거보조금 수십억 원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 501억9700만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총액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소 125억 원가량씩 받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 5%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25억 원가량씩 챙긴다. 두 당은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 하면서 각각 14석(더불어민주연합), 13석(국민의미래)을 확보한 상태다. 황운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도 선거보조금 잔여금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됐다.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최소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기후민생당(민생당 후신)과 진보당도 최소 1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채연 ycy@donga.com·조권형 기자

한국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3면

IPO 지연에 속타는 기업들 … "투자 유치·신사업 물건너갔다"

IPO 신청하고 수개월째 감감 … 거래소 역대급 '상장 병목'

작년 7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노브메타파마는 8개월째 심사를 받고 있다. 개발 중인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받으면서다. 공모 자금으로 임상을 진행하려던 이 회사는 연구개발 자금이 소진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1년 만에 심사를 통과한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도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블록체인 연구소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으나 미뤄졌다. 상장 지연으로 '코인 열풍'에 올라탈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시름하고 있다.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 등 기관투자가들이 상장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신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기업공개(IPO)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투자업계의 자금 경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PO 환경 변했는데 심사 규정 그대로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 예비 심사를 받는 곳은 4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곳이 지난해 하반기 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규정상 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넘긴 지 오래다.

의약품 위탁생산 전문기업 이엔셀은 노브메타파마와 마찬가지로 8개월째 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케이엑스인텍, 유라클, 아이빔테크놀로지, 엔지노믹스 등도 6개월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 기간을 훌쩍 넘겨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국 상장이 무산된 곳도 적지 않다.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이브로드캐스팅(삼프로TV)은 예심을 청구한 지 7~8개월 만에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에 각각 신규 사업 확장 등을 뒤로 미루며 IPO 작업에 매달린 만큼 임직원의 허탈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시대 변화 못 쫓는 상장 심사
기술 등 정성평가 시간 늘었는데
30명이 코스닥 심사 … 감당 안돼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약화 지적

삼쩜삼, 7개월 지나 결국 미승인
심사 늦어지면 '문제 있다' 루머
상장 준비 전에 예심 청구하기도

심사 속도가 느린 건 거래소 IPO 심사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업이 상장에 도전해서다. 매년 100건에 가까운 코스닥 IPO 기업을 30여 명에 불과한 인력이 심사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 신청 건수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맞춰 인력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엔 부담이 크다.

기존에는 재무 성과 등 정량 평가가 주된 상장 적격성 심사 기준이었는데, 기술성과 성장성만을 보는 각종 특례 제도가 생기면서 정성 평가에 쏟아야 할 시간도 늘어났다.

100일 넘게 상장심사 받는 기업들

기업명	업종	청구일	소요 기간
노브메타파마	신약 개발	2023년 7월 27일	161
이엔셀	의약품 위탁 생산	2023년 7월 27일	161
케이엑스인텍	통신·방송 장비	2023년 8월 31일	137
유라클	모바일 소프트웨어	2023년 9월 8일	131
아이빔테크놀로지	생체현미경	2023년 9월 26일	119
엔지노믹스	단백질 효소	2023년 9월 26일	119

※22일 기준. 소요 기간은 영업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동안 증시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업종에 속한 기업의 상장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꿈비(유아용품), 나라셀라(와인 유통), 에코아이(탄소배출권) 등에 이어 올해 케이웨더(기상 정보) 등이 업계 1호 상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 기간이 반년 넘게 걸린 이노그리드, 자비스앤빌런즈, 이브로드캐스팅 등도 모두 업계 1호 상장사에 도전한 곳이다.

2년 주기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는 거래소 인사 시스템도 심사 지연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심사 업무를 맡은 담당 인원이 교체되면 업무 파악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순환 보직으로 인해 IPO 기업이 가진 기술성이나 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심사 시간보다는 상장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눈치 보며 발만 '동동'

거래소의 심사 지연이 당연한 일이 되면서 IPO를 통한 조달 시점을 예측하기 한층 어려워졌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모주 시장 상황과 별개로 제도적 관문이 기업의 성장 전략에 과도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예심을 청구한 뒤엔 추가 투자 유치나 신사업 확장이 제한되는 만큼 거래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계획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에 수개월이 걸린 한 IPO 기업 대표는 "원하던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심사가 지연되다 보니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악소문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부 IPO 기업은 이런 거래소 심사 지연을 감안해 상장 준비를 마치기 전에 먼저 예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어차피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필요한 계약이나 실적 개선 등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목표 시기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지만, 거래소는 이런 기업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상장 규정상 45영업일이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애초에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IPO 업종과 기술력에 발맞춰 전문 심사 인력 배치 및 상장 규정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배정철 기자

김보빈·최지은·이민준 아나운서(왼쪽부터)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티비에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티비에스(TBS)가 5월31일 폐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상화를 모색해온 정태익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퇴사했다. 목희수 라디오본부장이 임시로 대표대행을 맡았다.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은 18일 '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의회는 5월31일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만 승인한 상태이고 그 이후까지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며 "먼저 배에서 내리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알렸다.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줄 테니 서둘러 퇴직하라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방송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 "티비에스를 없애는 게 시민의 명령"이라며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 예산 삭감 등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년 만에 티비에스 경영진도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허리케인 라디오'를 지켰던 최일구 앵커도 지난 15일 티비에스를 떠났다. 시간당 9620원, 최저시급을 받으며 버텨온 유일한 외부 진행자였다.

"새로 온 목희수 본부장이 저녁 6시로 시간을 옮겨 과거 송도순·배한성의 퇴근길 교통정보 같은 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철 지난 스타일이라 생각했지만 타이태닉과 함께 침몰하는 마음으로 5월31일 폐국하는 순간까지 함께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제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지난 6년 반을 함께 호흡해온 김경래 피디를 주조정실 메인디렉터로 발령냈다. 과거 몸담았던 엠비시(MBC) 파업 때 보복 인사가 생각났다. 그때도 밉보인 기자와 피디를 그런 자리에 보내 완전히 물먹였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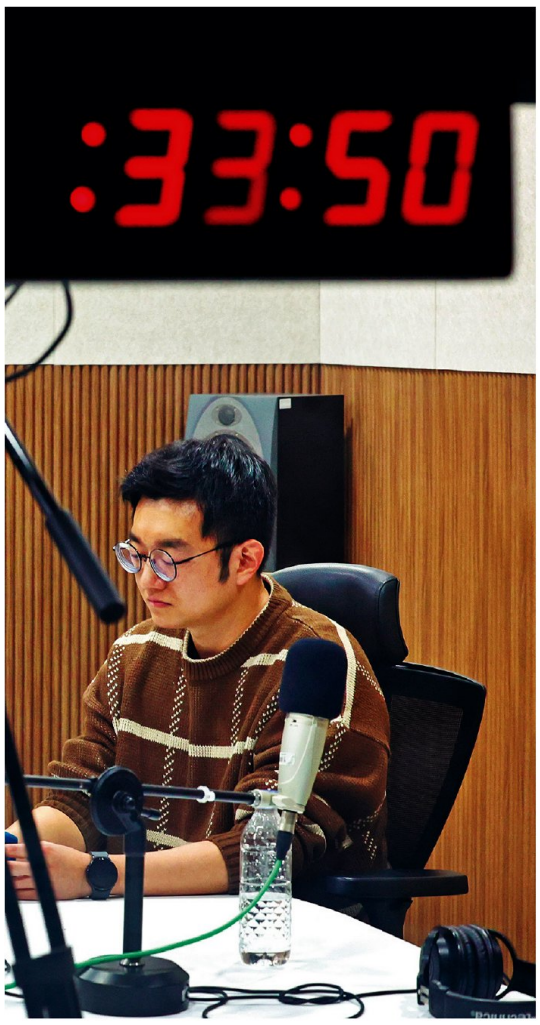
최 앵커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15일) 마지막 생방송을 끝내고 나오는데 아나운서·피디·직원들이 도열해 송별하는데 고맙고 미안했다. 티비에스에 입사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들과 6년 반을 함께했다. 양처럼 순하게 일을 했을 뿐인 그들이 일자리를 잃고, 폐국을 맞아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나는 나왔지만 거기 남은 모두가 생활인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멀리서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언론도 제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서울시의회의 계속된 압박에 이미 95명이 티비에스를 떠났다. 현재 남은 구성원은 259명이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반신반의한다. 95.1㎒ 티비에스 라디오, 영어 등 외국어로 방송하는 101.3㎒ 티비에스 이에프엠(eFM), 티비에스 텔레비전까지 3개 채널을 운용하는 방송사를 설마 폐국하겠냐, 길들이기가 끝나면 정상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텼다. 묵묵히 일하는 게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소임이라 믿으며 방송 최전선을 지켜온 아나운서 3명이 "이제는 말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나섰다. 17년차 최지은, 15년차 김보빈, 3년차 이민준 아나운서다. 이들은 각각 '네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도 김보빈입니다' '강지연·이민준의 9595쇼'를 진행하고 있다. 최일구 앵커 표현처럼 "순한 양처럼 묵묵히 일해온 이들"을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티비에스 사옥 12층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폐국이 피할 수 없는 임박한 미래가 된 현실에 분노하며 가슴 깊이 묻어둔 얘기를 풀어냈다.

"직원들은 똑같이 주어진 일 열심히"

세 아나운서는 설마설마했는데 폐국이 현실로 닥친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라도 시민과 구성원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민준 "어려워도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 청취자도 '곧 나아질 것'이라는 응원 문자를 보내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합니다. 1990년 개국해 34년 동안 공적인 역할을 해온 방송사가 정말 사라질 위기까지 왔는데도 세상이 너무 조용한 게 안타까워 최소한 애청자·시민들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인터뷰를 자청했어요."



커버스토리
TBS 아나운서 3인의 호소

‘폐국’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현실 “‘편향 낙인’ 대신 34년 역사 봐주길”

‘편파방송’ 주장하며 예산 끊은 서울시의회, 김어준 등 떠났는데 압박 계속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난받는 상황…상업광고 막아놓고 독자생존 요구해”
6월부터 예산 0원…“어두운 밤 불 켜진 편의점 같았던 방송, 폐국 막아달라”

김보빈 “청취자를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투입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똑바로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제 티비에스는 필요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하는 일, 저희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허탈감도 많이 느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지은 “티비에스 폐국이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연관검색어로 뜨기 시작했어요. 희망보다는 폐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구성원이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하는지, 그냥 사그라드는 불빛이 아니라 공영 자산인 전파를 통해 시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서울시의회는 김어준·주진우·신장식씨가 진행한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티비에스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티비에스를 압박했다. 그들은 지난해 초 티비에스를 떠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티비에스를 편파방송으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게 현실이다.

김보빈 “김어준씨를 비롯해 그분들은 지금 다 나갔고 티비에스 직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저희는 주어진 방송을 하루하루 해내는 게 티비에스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뒷감당을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쉽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티비에스 34년 역사에는 김어준씨, 주진우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인물과 역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종환 선생님이 음악 방송을 오래 지켜주신 적도 있고, 많은 개그맨들이 풍자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했어요. 아나운서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생방송을 매일같이 지켰어요. 저도 15년을 그렇게 했고요. 그 모두가 티비에스 역사인데 편파방송, 그 주홍글씨 하나로 티비에스를 지워버리려는 게 아닌지, 그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최지은 아나운서는 인터뷰가 불러올 후폭풍을 걱정하며 이른바 우리 사회 보수·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티비에스의 현실에 답답함과 좌절감을 드러냈다.

최지은 “분명히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면 댓글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한쪽은 ‘너희가 김어준을 버렸으니까 망해도 싸다.’ 다른 쪽에서는 ‘너희는 좌편향 방송을 했으니까 망해도 싸다.’ 티비에스 역사엔 34년 동안 시민과 호흡하며 켜켜이 쌓아온 다양한 프로그램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 편향 방송으로 낙인찍혀, (보수와 진보) 절반으로 나뉜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있어요. 입사한 지 17년이 넘었는데 왜 제 삶과 티비에스의 모든 역사가 이쪽저쪽 시민들로부터 다 버림받아야 하지요? 저는 코로나19 때 특보 방송을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공중 보건 분야에 여러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도 크고, 공익성을 인정받고 시청자도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무시한 채 너희는 좌편향 방송을 했으니 망해도 돼, 너희는 김어준을 내쫓았으니까 망해도 된다는 프레임에 갇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현실이 답답하죠.”

이민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할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그러니까 진작에 김어준을 내보냈으면 됐잖아요’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김어준씨 나간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잘되겠네요’라면서 가더라고요. 아직도 티비에스엔 그 잔상이 남아 있고, 정확한 티비에스 상황은 시민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너무 제 목소리를 안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워요.”

“걸음마 떼고 있는데 밖으로 몰아내”

서울시의회는 티비에스에 독자생존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22일, 오는 5월31일까지 운영비, 청사유지비, 조기퇴직급여 등 명목으로 93억원을 지원하면서 제작비는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 그마저 마지막이라며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티비에스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서울시 지원금으로 운영해온 티비에스가 홀로 서고 싶어도 생존을 위한 최소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김보빈 “너희 스스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독립하라는 게 서울시 요구인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독립재단이 되면서 자체 사업을 해보자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잘 안됐어요. 상업광고는 막혀 있어요. 독립재단이 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막 신생아에서 걸음마를 떼는 시기인데 당장 독립하라, 자생하라고 한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최지은 “독립을 위해선 실무적으로 협의할 게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부터 풀어야 하고, 티비에스 주파수의 성격 규정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독립 법인 하라고 하는데, 방송 생태계에 대해 알고 얘기를 꺼낸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저희는 공적 자산으로 출발했고, 34년 동안 공공성을 기반으로 방송했는데 그 성격을 무시한 채 그냥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라는 게 과연 맞는 요구인가요?”

세 아나운서는 민영화를 말하지만 매각도 쉽지 않은 게 티비에스의 엄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민준 “민영화를 말하는데 누군가 티비에스를 사려면 이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사업에 이득이 되는 구조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입만 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니 사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없는 것이죠. 최소한 상업광고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데 일단 선조치(폐국 방침 결정)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독립하라고 압박하는 건, 많이 아쉬운 결정이죠.”

최지은 “자꾸 내몰기만 하니 저희도 힘들고, 청취자도 무관심 속에 떠나가는 ▶▶▶

커버스토리
TBS 아나운서 3인의 호소

►►►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가야 하나요? 정치권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를 플랫폼으로 이용만 했지,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 해결해주려 하지 않아요."

이민준 "시민들은 너희도 와이티엔(YTN)처럼 민영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산 끊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티비에스는 와이티엔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와이티엔은 남산타워도 있고 건물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이 있으니 임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구매자가 달려들지만 티비에스는 방송국 건물도 저희 것이 아니거든요."

아나운서가 작가상을 받았다

아나운서를 비롯한 티비에스 구성원은 '이 아니면 잇몸으로 산다'는 자세로 버텨왔다. 특히 최전선에서 청취자를 만나는 아나운서는 피디와 단둘이 글도 쓰고 섭외하고 스스로를 최대한 쥐어짜며 2년 가까이 견뎠다. 최지은 아나운서는 이 과정에서 '작가상'까지 받았고, 아나운서들 스스로 "작가로 재취업하면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주고받는 등 씁쓸한 현실과 마주한다고 전했다.

최지은 "2022년 3월부터 제 프로그램엔 작가님이 안 계셨어요. 2시간짜리 방송 코너를 저와 프로듀서 둘이 짜고, 코너별 원고도 제가 썼죠. 그러다 보니 아나운서인 제가 작가상(2023년 8월 한국피디연합회 시상)까지 받았어요. 에스비에스(SBS) 피디가 당시 시상을 했는데 '현직 아나운서가 작가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며 '이런 현실을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지난해까지 박구용 전남대 교수, 썬킴, 꽈추형, 피아노오빠, 대금이누나, 정욱식 대표 등 최장군의 게스트 라인업이 화려했어요. 모두 선의로 와주셨는데 (최저시급 출연료) 그마저도 드릴 여력이 안 돼 올해 1월1일부터는 피디님이 겨우 오프닝 원고만 쓰고, 나머지는 다 청취자 문자로 채워가고 있어요. 2시간 방송에 원고는 에이포(A4)용지 딱 한장입니다. 2시간 생방송 동안 허덕허덕하면서 운에 기대고 청취자분들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보빈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2022년 여름부터 작가님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피디와 저, 단둘이서 모든 역할을 나눠 기획하고 쓰고 말하고. 저희끼리 '회사 없어지면 작가로 재취업을 노려보자'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나마 청취자들이 응원해주고 문자를 보내면서 방송을 채워주니 청취자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감정노동의 고통도 극심하다고 했다.

최지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요. 아나운서는 방송 최전선에 있잖아요. 저희도 감정노동자인데 매일 방송에 노출해야 하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 유튜브로 동시 접속자가 몇백명씩 들어와요. 오후 4시대 프로그램이라 텐션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죠. 우는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회사 안 좋다고 계속 노출할 수도 없고, 모든 걸 감내하며 좋은 에너지를 마지막까지 끌어내서 청취자에게 전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 현실과 방송 사이의 간극, 그 이격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나마 최지은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이 만든 팬카페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시한도 5월31일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싶어요. 청취자께도 못 할 짓이고, 17년 동안 방송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저는 또 어디에 가서 제 정체성을 찾아야 할지 이런 고민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얘기를 듣던 김보빈 아나운서는 "아~, 너무 슬프다"라고 탄식했다. 이민준 아나운서는 "저처럼 짧게 근무한 사람부터 20년 넘게 몸담은 사람까지 다양한 이들이 일하는 직장이고, 모두 생활인인데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이렇게 확 빼앗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결혼하는 직원이 많은데 마음껏 행복할 수도 없고, 축하받지도 못해요. 저도 '요즘 회사는 괜찮니'라고 묻는 부모님께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 잘 찾아뵙지도 못해요. 점점 위축되는 제 모습이 너무 슬퍼요"라고 했다.

"서울 시민 위해 오세훈 시장이 나서야"

5월31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은 더 크다. 폐국이 현실이 되는 6월1일부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민준 "저희가 아직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월 재허가 심사까지 어쨌든 방송은 할 수 있죠. 그런데 6월1일부터 월급이 없는데, 과연 누가 방송을 이어갈지…."

최지은 "더 현실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요. 6월1일부터 예산이 0원인데 방송국 사옥도 서울시 소유라 임차비를 내야 하고, 방송을 내보내려면 송출료도 필요해요. 지금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 이후 상황은 예측할 수 없어요."

김보빈 "그때 회사 문은 열릴까요? 아나운서인 저희만 마이크 앞에 선다고 방송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디·엔지니어·기술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드는 건데 그분들 마음은 어떠실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건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의회는 강경하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1월17일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티비에스 지원을 완전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었는데 (시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티비에스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아나운서는 오 시장에게 해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민준 "시장이라는 자리도 결국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티비에스에도 서울시민이 있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정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보빈 "오 시장님도 저희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희는 티 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일을 해나가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티비에스 34년의 역사를 생각해 주세요."

최지은 "오 시장님도 설마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연애 싸움도 서로 격해지면 계속 선을 넘는 것처럼 여기까지 와버린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손을 내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김보빈 "올해 15년차인데 어떻게 되든 제가 있던 이곳에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4시에 집에서 나와요. 정말 깜깜한데 편의점 하나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울먹이며) 자꾸 눈물이 나네요. 뭔가 위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방송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어두운 밤에 불 켜진 그런 편의점처럼, 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보빈 아나운서는 애써 참아온 눈물을 흘렸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서울시의 티비에스 지원을 중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2022년 11월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티비에스 직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중계되는 가운데 조례 통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03월 23일 (토)
한국일보
정치 03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여성 14% 그쳐… 전과 11범도 등록

서울 종로 7대 1 '최고 경쟁률'

☞1면 '민주당 강북을 친명 엔딩'에서 계속

박 의원의 경선 탈락이 문제라면, 그 전 단계인 후보 공모에서 탈락한 한 대변인도 공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강북을 후보의 잇따른 교체는 이 대표가 자랑한 '시스템 공천'을 무색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공보단 논평에서 "평소 이 대표를 비판하던 눈엣가시 같던 박 의원을 보란 듯이 떨어뜨리고 친명 한 대변인을 전략공천한 게 '이재명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날 마감됐다. 이번 총선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첫날 14개 정당이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이날 24개 정당이 등록신청서를 냈다. 신청서 수리 여부에 따라 최종 집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민수

38개 정당이 모두 비례 후보를 낼 경우 비례 투표용지 길이는 51.7㎝에 달할 전망이다. 21대 총선 당시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의석을 노린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48.1㎝였다. 유권자들이 이보다도 긴 투표용지를 받아 들게 된 셈이다.

지역구의 경우 254개 지역구에 699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서울 종로(7대 1)다. 후보 중 여성은 99명으로 14%에 그쳤다. 가장 어린 후보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등록한 1996년 1월생 우서영 민주당 후보다. 최고령은 1938년생으로 경북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일윤 후보다.

699명 가운데 전과자는 242명으로 34%였다. 최다 전과 기록은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호 후보로 11범이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네 차례 벌금형이 포함됐다. 9명은 등록 마감일까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했다. 최근 5년 내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83명(전체 11.8%)이었다.

매일경제
2024년 03월 23일 (토)
기업 03면

“고객·경쟁사·앱개발사 모두 피해”… 美정부 ‘애플 생태계’ 정조준

‘혁신 아이콘’서 공공의 적으로

역대 빅테크 소송중 가장 강력

“애플 독점에 LG폰 사업 접어”

‘폐쇄적 정책’ 피해 줄줄이 나열

애플 “자사 이익 때문 아니라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한 것”

주가 급락, 시총 150조원 증발

“애플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전술(tactic)을 많이 썼다.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적은 신제품,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남겼다는 점에서 반독점 혐의가 뚜렷하다.”(미국 법무부 차관)

미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애플에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이날 반(反)독점 혐의로 뉴저지 법원에 제소한 항목들은 전 세계 주요 정부가 애플에 적용한 반독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중에서도 전례가 없을 만큼 작심하고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당국의 소송과 조사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이날 애플 주식은 4.1% 급락한 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1130억달러(약 150조3691억원)가 증발했다.

미 정부와 빅테크의 법적 충돌은 1998년 5월 MS, 2020년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나왔던 애플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앱스토어나 애플뮤직 같은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는 애플 생태계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크다. 비싼 가격으로 애플 제품을 써야 했던 소비자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 앱스토어 입점 기업까지 피해자가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이번 소송은 좁은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곳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의 가장 강력한 사업인 아이폰을 직접 겨냥했다”면서 “아이폰은 2007년 이후 수십억 대가 판매됐으며, 애플 제국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소송 서류에서 애플의 불법적인 독점으로 아마존과 MS, HTC,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한 아이폰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스마트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을 차단하고,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다. 애플워치 이외의 스마트워치도 사용하기 어렵게 생태계 구조를 짰다.

특히 메시지 창에서 아이폰 사용자와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고객들이 안드로이드폰으로 넘어가기를 꺼리게 한 것도 반독점 사례로 꼽았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슈퍼앱도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았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애플은 과거 슈퍼앱 내부의 앱을 개별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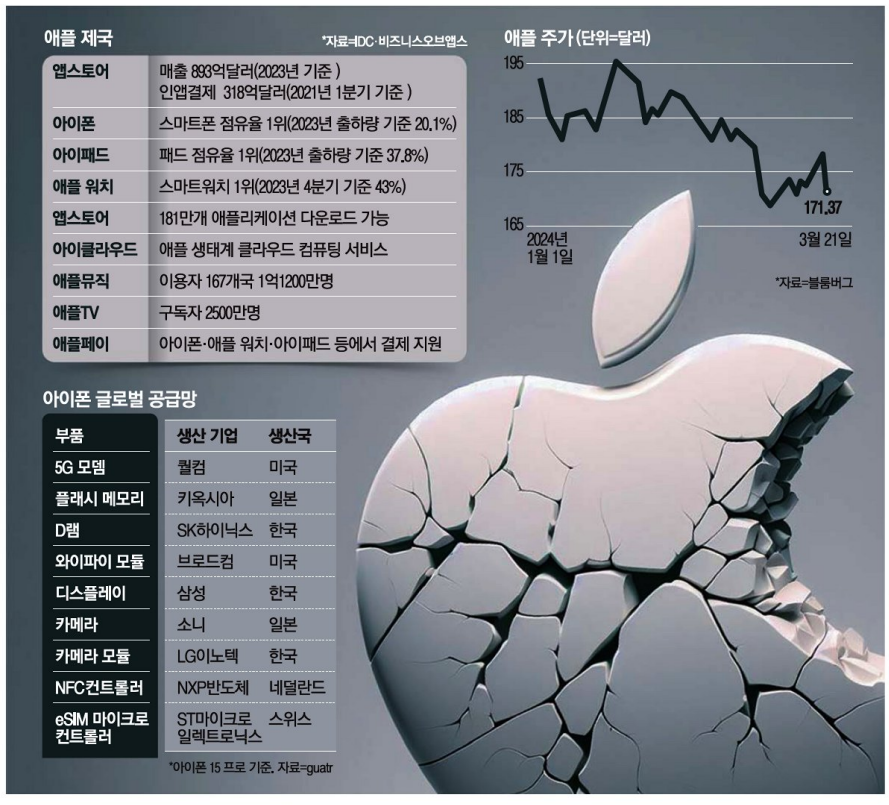
미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언급하면서 애플의 현재 행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MS를 분할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던 이 소송은 결국 양측의 합의로 분할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MS는 합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결국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먼저 법무부는 애플이 매출 기준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점유율은 64%로 줄어든다. 1998년 소송 당시 95%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MS와는 차이가 크다.

그동안 소비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 놓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을 불법적인 독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플은 그동안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 정책이 고객을 묶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과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그동안 법원에서 애플이 승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이 고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애플까지 미 법무부와 소송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미 법무부와 검색 시장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해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아마존이 독점을 통해 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소송을 당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법무부와 소송 중이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2024년 03월 23일 (토)
서울경제
종합 01면

"전력기금 손질"…내주 부담금 개편 발표

정부, 요율 3.7%→2%선 검토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폐지·감면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력기금이 목표와 맞지 않게 쓰이는 측면이 있다"며 "전력기금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 수준으로 내리는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전력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10.6%에 달한다. 정부는 전력기금 부담금뿐만 아니라 껌 폐기물 부담금과 수산자원조성금 등의 완화안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1만 1000원)도 개편 대상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세종=조윤진 기자

2024년 03월 23일 (토)
서울경제
종합 04면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내주 부담금 개편안 발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등 완화
출국납부금 1.1만원 폐지 추진
환경부담금 등은 조정대상 제외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 이상은 폐지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부담금 개편 논의에 밝은 한 관계자는 22일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분의 1 이상은 손을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금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율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항목으로 전력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전력기금 부담금이 전기 산업 발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전력기금 부담금을 개편하려는 배경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금 징수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3조 2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중 1조 3100억 원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에너지특별회계로, 2000억 원은 기후환경기금으로 전출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인자나 사용자가 아님에도 유지되고 있는 조세성 부담금이 현재 반 이상은 된다"며 "재정 충당 등의 목적을 가진 조세성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하는 등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등 원유 수입·판매 업체에 매기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원유·석유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가격과 상관없이 l당 16원을 부과하는데 l당 부과금을 낮추면 원유 도입 단가가 내려가 주유소 휘발유값 인하도 이끌 수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어업·양식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 유류 업체나 대형 선사에 징수하는 방제 분담금, 껌 제조사에 판매가의 1.8%를 징수하는 껌 폐기물 부담금 등도 폐지 또는 완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물 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18개 법정 부담금 개선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하며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스며든 준조세 격 부담금들도 손볼 방침이다. 관광진흥개발금 1만 원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을 더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이 대표적이다. 주요 부담금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물가를 자극하는 각종 민생 요금도 소폭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202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며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규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담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기로 했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부담금도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부담금 개편 작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쪽에 있는 부담금은 딱히 조정할 게 많지 않다"며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내는 부담금이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부담금 등은 조정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종=조윤진·심우일 기자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종합 01면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중국

내수 침체되자 수출 헐값 공세
친중 국가까지 "중국산 막아야"

"중국산 제품의 약탈적 영업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으로 대표적 친중(親中) 행보를 보여온 브라질의 화학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반(反)덤핑 조사에 나섰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중국산 등 수입 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을 검토 중이다. 실제 올 1~2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인 1590만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뿐 아니라 주요 산업에서 초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발(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내수 소비가 죽은 중국이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정구 기자 A10면에 계속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경제 10면

中의 초저가 공습… 美·EU, 관세로 맞서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

A1면에서 계속

중국이 시장에 풀어버린 초저가 제품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낮아져 좋지만 기업과 산업 전반에는 악재다. 기업은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려면 수익을 포기하고 밑지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부채가 늘어난 기업부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이달 7일 발표한 올 1~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총 수출입액은 6조6100억위안(약 12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 특히 수출액은 3조7500억 위안(약 6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나 늘었다. 집적회로, 선박, 일반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자동차 부품 등 전기 기계 제품과 의류, 섬유, 가방, 장난감, 가구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두 달간 수출 실적에 대해 "시장을 다원화하고 수출 구조를 최적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다르다.

◇30년 만에 '2차 차이나 쇼크'

1990년대 후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1차 차이나 쇼크' 때, 중국산 저가 생산품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누르는 효과로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만들었다. 다만, 이면에는 각국의 제조업 기반 붕괴가 이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했다.

현재 당면한 '2차 차이나 쇼크'는 장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저가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산업 기반은 흔들린다. 당장은 값싼 제품을 소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린 자국 산업이 붕괴하면 고용 감소, 소비 감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중국의 저가 철강, 석유화학 제품은 동남아 시장 질서를 망가뜨린 데 이어 중남미까지 퍼졌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초저가 중국 소비재도 북미를 포함해 글로벌 전역에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수요가 둔화한 전기차, 배터리도 가격을 재차 내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초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선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1990년대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EU 이어 친중 브라질도 규제 나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붕괴를 우려하며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1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멕시코 등 제3국 공장을 통한 중국 기업 상품 유입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 9월 "중국산 전기차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던 유럽연합(EU)은 올 하반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브라질 정부도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6개월 사이 철강, 화학제품, 타이어 등 최소 6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철강업계는 정부에 중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9.6%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 약탈적 영업에 맞서야"
美, 中 철강 우회 유입 규제 추진
브라질, 6개 분야 반덤핑 조사 중
국내 철강사 포스코·현대제철도 중국산 강판 덤핑 조사 신청 검토

중국發 '디플레이션 수출'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반대 개념으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한다. 최근 중국은 경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부진해 재고가 폭증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해외에 중국 생산품을 헐값에 내다 팔고 있다. 이로 인해 헐값 중국 상품을 수입하게 된 나라들이 자국 내 물가 하락으로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경제 10면

배터리·철강… 中이 보조금 쏟아 키운 산업들 줄줄이 공급 과잉

제품 남아돌자 싼 가격에 수출
글로벌 시장에 큰 혼란 일으켜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탄탄하고 큰 내수 시장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중국 내에서 먼저 완전한 자급 체제를 구축한 뒤 수출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런 정책으로 싼값의 중국산 제품이 세계에 쏟아지며 시장을 교란하자 다른 나라에선 중국산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로 육성된 가장 대표적 산업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낙점하고, 2009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생산자에게 직접 돈을 줘 출고가를 낮추는 형식의 보조금을 중국 업체에만 편파적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행태를 통해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싼값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중국이 전기차 업체에 쏟아부은 보조금 액수만 총 1600억위안(약 30조원)이고, 특히 업계 1위인 BYD는 70억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중국 기업들은 과잉 공급 속에서도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6년 국영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을 앞세워 동부 연안에 '7대 석유화학 기지'를 건설하며 단기간에 자급률을 끌어올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업황이 안 좋았던 최근에도 석유화학공정을 국가 차원에서 증설·육성하며 자급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 역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려 급성장했다. 제품을 대량으로 우선 생산해 가격을 낮춘 뒤 동남아 등에 내다 팔고,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늘어나더라도 중국 내에서 선박용, 부동산용 등으로 대량 납품해 소진할 수 있다.

강다은 기자

2024년 03월 22일 15:37 (금)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대전/충남

''국가 조작통계 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사건 재배당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이 재배당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재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고 담당 변호사 중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인물 25면

인사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서기관 황지혜▷기획조정실 서기관 유수민 최경자▷디지털교육기획관 서기관 정한뫼▷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영균▷인재정책실 서기관 김재극 박은정▷책임교육정책실 서기관 백봉현 이종환▷교육복지돌봄지원국 서기관 남윤철▷교육자치협력안전국 서기관 윤지효

▲**금융위원회**◇전보▷기획조정관 유영준

▲**한경미디어그룹**◇한국경제TV▷대표이사 현승윤◇한경엘앤디▷포천힐스CC 대표 송광림◇한국경제매거진▷상무이사 겸 한경비즈니스 취재편집부 편집장 김용준◇한국경제신문▷업무지원국장 겸 제작국장 박해준▷지방독자부장 겸 영남지사장 겸 한경영남프린팅 대표 김양진▷독자지원부장 겸 한경마케팅센터 대표 엄태덕▷수도권독자부장 이정수▷지방독자부 중부지사장 송주현▷미디어마케팅국장 전우형▷신문광고 부국장 겸 신문마케팅1부장 유형노◇한경디지털랩▷디지털자산센터장 김병언

▲**KBS 아트비전**▷경영이사 김종욱▷경영기획부장 이철웅▷디자인부장 김희정▷문화사업부장 김종우

朝鮮日報
2024년 03월 23일 (토)
인물 25면

부음

▲**김남철** 별세, **김옥례** 남편상, **김은나**·**김동하**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부친상=22일8시18분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4일5시, (02)923-4442

▲**박상림** 별세, **최금동** 남편상, **박연옥**·**박재희**·**박현순** 인하대 대외협력처장 부친상, **주성우**·**정용태** 장인상, **정효정** 시부상=21일23시40분 인천 인하대병원, 발인 24일7시30분, (032)890-3191

▲**신동기** 별세, **오계진** 미술 작가·**오금이**·**오은경**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오달진**·**오철진** 모친상, **박문삼**·**안문형** 남서울대 미래융합대학 스마트팜학과 교수 장모상, **김미현**·**이영주** 시모상=21일14시18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5시, (02)3010-2411

▲**정상임** 별세, **길문정** 전민일보 편집부장 모친상=22일3시55분 전주 효자장례타운, 발인 24일7시50분, (063)228-4441